

월간

나라재정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

2020. April
Vol. 40

4



재정 INSIGHT

KPFIS 인사이트
재정칼럼
툰아보기

재정 NOW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
키워드 재정
해외재정동향

재정 STORY

이달의 재정 이야기
재정 Talk Talk
미술관에 간 경제학자
재정 캘린더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Contents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

April, 2020
VOL. 40

월간
나라재정

발행처 한국재정정보원
주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전화 02-6273-0500
팩스 02-6312-8959
홈페이지 www.kpfis.or.kr
발행인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
문의 재정정보분석본부 | 02-6908-8593
제작 경성문화사 | 02-786-2999

재정 INSIGHT

04 • KPFIS 인사이드

- 재정성과관리제도 해외 동향과 시사점
박정수 재정정보분석본부 부연구위원
-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
: 주요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오유리 정보보호본부 사원

20 • 재정칼럼

- CES 2020으로 보는 자율주행 센서 및
AI 칩 주요 동향과 향후 지원 방향
정구민 국민대학교 전자공학부 교수
- 미래산업의 융복합 플랫폼,
디지털 트윈의 이해와 지원방안
박상언 경기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

28 • 톨아보기

- 2020년 산업·기술 혁신을 위한 재정지원 방향



재정 NOW

- 30** •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 36** • 「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
- 42** • 키워드 재정
사전투표
- 46** • 해외재정동향
‘코로나19’ 대응 주요국의 재정지원



재정 STORY

- 50** • 이달의 재정 이야기
· 국가 재정을 보완하는 민간투자사업
· 든든한 재정의 문지기 예비타당성조사
- 56** • 재정 Talk Talk
의무지출, 재량지출은 무엇인가요?
- 58** • 미술관에 간 경제학자
튤립 버블 경제의 광기(狂氣)
- 62** • 경제철학 이야기
자본주의윤리의 개척자, 임마누엘 칸트
- 66** • KPFIS의 서재
- 68** • 재정 캘린더
- 70** •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01
KPFIS-인사이드

재정성과관리제도 해외 동향과 시사점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재정사업의 기획에서 집행, 환류, 종료에 이르는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효율적 재정운용을 뒷받침하고,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재정성과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재정정보시스템 지원 노력은 국제기구의 권고에서부터 각국 정부의 업무 개선에 이르기까지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국제기구 및 주요국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재정성과관리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도록 한다.

1 ————— 재정성과관리제도의 개요

재정은 정부의 역할을 화폐 단위 기준으로 표현한 것이며, 예산은 재정의 1년간의 지출 계획을, 집행과 결산은 실제 지출 결과에 대한 기록을 의미한다. 특히 예산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단과 비용의 표현으로서, 집행 후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 역할을 하게 된다. 재정의 목적 달성 여부는 효율성, 형평성 등 다양한 가치를 통해 평가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각종 측정 수단을 구비하여 계획 대비 집행성과를 수집하고 이 성과정보를 환류하여 차년도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처럼 성과정보를 바탕으로 재정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것을 성과예산(Performance Budgeting)제도라고 한다. 성과예산제도 중 전체 재정을 사업 단위(Program)로 분류하여 각각의 재정사업에 대해 성과를 측정하고 환류하는 방식을 재정사업 성과관리 또는 재정성과관리(Program Performance Management)라고도 한다.

예산 편성을 위해 수입과 지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노력은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1921년 「예산회계법」 제정과 재무부 예산국¹ 설치가 시초이며, 예산을 사업별로 나누어 정보를 생산하고 환류하기 위한 체계적 노력은 1962년 기획예산 제도(PPBS: Programing, Planning Budgeting System) 도입으로 시작되었다. OECD, World Bank 등은 2000년대부터 사업을 기준으로 예산을 나누어 성과정보를 생산할 것, 편성과 집행, 환류에 이르는 재정의 전 과정을 성과정보를 바탕으로 관리할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재정사업을 기준으로 성과정보를 생산하고 재정과정에 활용하기 위해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으로 성과중심 재정관리의 원칙과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를 전면 도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 재정성과관리제도 관련 최근 국제기구와 해외 동향

최근 OECD, World Bank 등은 성과예산제도에 대해 단순히 성과정보를 예산에 환류하는 것을 권고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국정과제와의 연계성을 강화할 것, 재정 집행 등 재정의 전 과정에서 성과정보의 활용을 높일 것 등을 강조하고 있다. 정보자산으로서 성과정보의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재정정보시스템(FMIS: Fiscal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을 통한 지원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OECD(2019)는 각 회원국 고위관료 네트워크 서베이 조사를 바탕으로, 앞으로 성과예산

¹ Bureau of Budget으로, 현재의 관리예산처(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를 말한다.



이 갖추어야 할 실무적 요건을 제시했다. World Bank에서 주관한 Moynihan and Beazley(2016)의 연구는 미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선진국과 러시아, 폴란드 등 구 공산권 국가들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운용 경험을 중심으로 차세대 성과예산(Next Generation Performance Budgeting)의 요건을 논의했다.

1) OECD

OECD는 회원국의 성과예산제도 도입을 장려하고 있으며, 제도 운영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가장 최근의 2019년도 보고서에서는 각국의 성과예산제도를 요약하여 갖추어야 할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성과 계획과 평가가 예산 과정에 통합되어 있어야 하며, 유용한 성과정보를 예산 과정 및 재정 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① 각각의 프로그램 또는 분야에 소수의 측정 가능한 지표가 있어야 하고, ② 이 지표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③ 다른 국가 또는 사업과 비교가 가능하면서도 시계열 추적이 가능해야 하고, ④ 범정부 국정과제와 명확하게 연결되어야 하는 점 등을 선결 요건으로 제시했다.

OECD는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성과예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7개의 정책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① 핵심 이해관계자의 수요를 반영한 제도 설계

성과예산의 목표와 체계는 정부의 재정개혁 또는 재정 관련 기본법 등 기본적 전략과 국정과제를 토대로 설계되어야 한다. 예산 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심을 반영해야 하며, 최고 결정자의 정치적 지지가 중요하다.

② 지출 우선순위와 전략적 목표를 반영

정부 예산은 각종 계획 및 지출 우선순위와 체계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그리고 중기계획 상에서 달성 가능한 목표와 측정 가능한 지표가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부처 목표 달성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한다.

③ 정부 활동의 복잡성을 관리할 수 있는 유연성 필요

프로그램 예산체계는 조직구조와 별개로 구축되어서는 안 되며, 예산의 분류와 조직 관리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자율성과 책임성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 개별 프로그램의 성과지표는 프로그램의 성격을 잘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④ 성과예산제도를 위한 인적자원, 데이터 등 지원 기반 투자 확대

예산당국은 개별 부처가 성과예산제도 운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성과정보를 전략적 자산으로 관리해 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해야 하며, 성과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 가능성을 증진해야 한다.

⑤ 의회,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감독을 통해 정부의 성과지향성과 책임성을 증진

성과계획서와 보고서는 감사원의 성과감사를 받아야 하고, 최종적으로 의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예산 및 지출 정보는 기계판독(Machine-Readable)이 가능하고 접속이 용이한 형태로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⑥ 성과예산제도는 사전 심사, 사후 평가 등의 재정관리 제도들로 보완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성과관리가 수행되어야 한다. 사후 평가는 매년 수행되어야 하며 결과는 예산 편성 과정에 환류해야 한다.

⑦ 성과예산 관련 인센티브를 통해 성과지향적 행태와 조직학습을 유도

정부는 성과지향적 조직문화를 촉진해야 한다. 성과 측정은 집행당국의 성과 향상을 위한 노력을 유도해야 한다. 성과가 낮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학습을 강조해야 한다.

OECD는 효과적인 성과예산제도 지향을 위해서 재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업그레이드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우수 사례로 프랑스의 성과지향적 재정개혁, 신규 재정정보시스템 CHORUS, 성과포털(performance-publique.budget.gouv.fr)을 제시하고 있다.

2) World Bank

미국, 호주, 동유럽 국가들의 성과예산 사례를 분석한 World Bank의 보고서는 성과예산제도의 목표가 공공재정의 효과성과 효율성 향상,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OECD의 2019년도 서베이가 각국의 성과예산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실무 지침의 수준에서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다면, 본 보고서는 성과예산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차세대 성과예산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각국의 사례 조사를 토대로 성과예산제도의 도입배경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원칙에 의한 개혁 목표를 실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2000년대 각국의 성과예산제도는 대체로 예측한 대로 작동하지 못하였으며, 성과 및 지표관리 결과를 직접 예산에 환류하려는 노력을 장려하는 World Bank의 권고 역시 실효성이 적었다. 이러한 과거의 성과예산제도 운영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성과예산제도의 목표가 현실적이어야 하고 실무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유용한 정보가 생산되어야 한다. 즉, 성과제도의 프로세스, 책임성 확보 등 전반적인 설계보다는 성과정보 생산 자체의 합리화를 통해 예산 편성 및 관리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성과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주된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표. 차세대 성과예산제도의 방향

	기존의 성과예산	차세대 성과예산
시작점	·예산 편성 절차 준수 ·형식적, 행정 부담 유발 ·성과정보 정확성 낮음	·최우선 사업영역과 전략적 정책의 우선순위를 강조
기대수준	·예산과정의 변화 ·법정부 성과관리를 도입하기 위한 행정개혁의 주요 추진력에 그침	·종합적인 성과관리 개혁을 위한 예산 과정의 변화 ·공공부문 인센티브의 변화 ·성과지향적 개혁의 지속성 확보
성과데이터의 활용	·(이론) 회기 종료 직후 예산 편성 과정에 활용 ·(현실) 사용 안 됨	·다양한 의사결정 시점에 활용 ·예산과정, 관리과정, 그리고 다년도 예산 편성 과정 등에 활용
성과정보 수요자	·예산당국	·부처 프로그램 관리자
필요한 관리역량	·집행과정에서 행정역량 부재 문제가 부상	·성과정보에 대한 수요에 바탕을 두고 성과예산 제도를 구축 ·성과정보의 활용을 위한 역량을 조성하기 위한 자원 투입 강조
변화에 소요되는 시간	·단기적 접근 ·개혁 우선순위에 의존적 ·때때로 버려지거나, 대체됨	·장기적 접근 ·다양한 개혁 노력과의 가치 일관성 ·경험에 바탕을 둔 점진적, 적응성 변화를 추구

자료: Moynihan and Beazley(2016). 「Toward Next-Generation Performance Budgeting」

특히 성과예산제도 시행에 있어 재정정보시스템의 지원과 행정역량의 구비도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성과정보의 생산 과정이 체계화되어있지 않은 채 제도를 도입할 경우, 과다한 행정역량의 소비에 비해 성과예산제도의 도입 성과는 크지 않았음이 특히 동유럽 국가 사례에서 나타났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정정보시스템이 성과예산제도를 안정적이면서도 때로는 완고해 보일 정도로 강건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3) 주요국 성과관리 개선 동향



미국

미국 연방정부는 재정성과관리제도 운영에 있어 법정부 성과 목표 체계와 시스템 지원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재정성과관리는 법정부 차원에서 예산편성·집행지침(Circular A-11) 등을 통해 관리 절차, 예산으로의 환류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Performance.gov 등 성과정보 공개를 위한 시스템 지원이 갖추어져 있으며, 개별 부처 차원에서도 자체 재정정보시스템에 성과정보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 지원 기능²을 갖추고 있다.

미국은 2010년부터 「정부업무평가법 현대화법」³을 제정하면서, 연방정부의 재정성과관리의 목표를 대통령 국정과제와 각 부처 우선순위 사업과제와의 일치, 재정사업 성과 향상을 위한 부처의 자율적 노력 증대에 두었다. 2018년 발표된 대통령 관리 아젠다

(President's Management Agenda)는 소비자 만족도 제고, 정부 현대화, 보조금과 출연금의 결과지향적 책임성 강화, 그리고 전략적 자산으로서 정보자원 관리 확대와 증거기반 정책 평가 확대 등을 성과관리의 주요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관리예산처, 2020). 이를 위해 부처의 각 미션 목표에 대한 전략적 검토(Strategic Review), 부처 우선순위 목표(APG: Agency Priority Goals) 기반 재정성과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미국의 재정과정에서 중앙 예산·재무관서인 관리예산처와 재무부는 예산 편성, 재무 원장과 회계결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실집행 및 성과관리는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고 재정정보 시스템 지원 체계도 이에 맞게 구축되어 있다.

재정관리시스템 중 성과관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관리예산처의 예산편성시스템(MAX A-11 Data Entry. 이하 MAX)과 개별 부처의 독립된 재정정보시스템이다. 관리예산처에서는 이에 더해 성과정보 공개 플랫폼, Performance.gov 시스템을 운영하여 성과관리 정보 공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성과관리 체계에 의한 각종 보고서 작성은 MAX로 초안이 제출되고 관리예산처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된다. Performance.gov에는 관리예산처의 최종 확정을 받은 보고서들이 업로드되어 공개된다.

개별 부처의 성과관리는 부처별로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 미국의 재정정보시스템 체계는 부처별, 산하기관별로 구축되어 있으므로, 부처 수준에서의 통합 역시 중요한 과업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사례로 살펴볼 보건복지부(HH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역시 여러 개의 산하기관이 존재하며, 이들 기관들도 독자적인 재정정보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들 시스템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인 UFMS(Unified Financial Management System)를 구축하고 있다.

재정집행과 회계결산, 자체 사업 관리 기능은 UFMS와 외부 모듈인 NBS(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Business System), HIGLAS(Healthcare Integrated General Ledger Accounting System) 등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미션, 전략목표, 핵심지표(KPI: Key Performance Indicator) 관리와 시각화, 보고서 생성 기능은 보건복지부의 본부에서 사용하는 UFMS의 하위모듈인 FBIS(Financial Business Intelligence System)에 기능이 집약된 형태이다. FBIS는 2012년에 UFMS의 하위 기능 모듈로 개통했다. 주요 기능은 예산·성과정보 대시보드와 분석기능, 보고서 작성 기능이다². 보건복지부의 UFMS는 2012년 개통 후 지속해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성과정보 관리를 위한 기능개선을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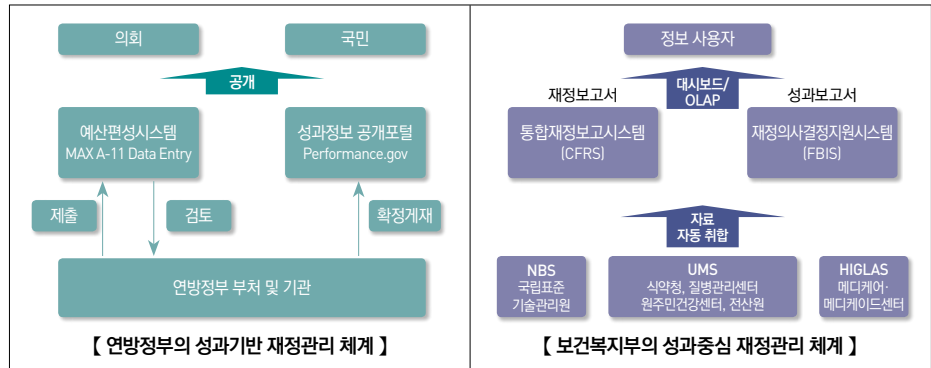


² BI(Business Intelligence)로, 기업이 데이터를 수집, 정리, 분석하고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기능을 총칭한다.

³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 Act Modernization Act of 2010로, 약칭 GPRAMA라고 한다.

⁴ 우리나라 dBrain의 OLAP(OnLine Analytical Processing), 성과관리시스템의 기능에 해당한다. 성과관리시스템에서는 개별 부처의 프로그램과 단위사업의 지표, 즉 KPI를 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계획서와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스템이다. OLAP은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통계분석시스템이다.

그림. 미국의 성과중심 재정관리와 시스템 지원



자료: 미국 관리예산처(2019). 「OMB Circular A-11」

미국 보건복지부(2019). 「FY 2018 HHS Agency Financial Report」



캐나다

캐나다의 재정성과관리는 재원배분 과정에서 성과정보의 활용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성과정보 관리 확대와 활용 강화, 정보 공개 확대를 주요 방향으로 하고 있다.

캐나다의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사업 전수에 대한 관리는 축소하는 한편, 사업 개개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성과정보의 활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화하였다⁵. 2016년 결과 지향 정책(Policy on Result)은 특히 성과계획서와 보고서에 포함되는 정보의 활용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와 고위공무원에게 제공되는 성과정보를 3단계로 단순화하고 보고서 작성 양식을 표준화하는 한편 결과지표의 지출 의사결정에 활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캐나다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재정정보시스템은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다. 이들 시스템에 대해서는 재정당국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재정정보시스템 표준(FM-SC: Financial Management System Configuration)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각 부처는 FM-SC에 따라 구축한 재정정보시스템에서 각각 프로그램별 성과지표를 관리하며, 표준 양식으로 작성, 관리되므로 중앙의 취합이 용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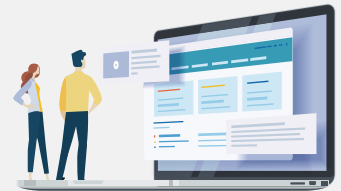
GC(Government Canada) Infobase는 중앙 재정시스템의 재정정보, 부처 시스템에서 제출하는 연간/분기/월별 재정정보와 성과계획·실적 정보를 취합하여 성과 중심으로 재정정보를 공개하는 시스템으로 2013년에 개통했다. GC Infobase 구축 이전에는 재정정보와 재정성과 정보들이 부처별, 제도별로 500여 종의 보고서에서 분산 공개되고 있어 이의 사용에 어려움이 많았다. GC Infobase는 각종 재정정보와 성과관리 결과 정보를 통합한 포털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예산 트리맵 방식 인포 도입(2018), 성과계획서 대조 기능 도입(2019) 등의 기능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⁵ 전략적 검토(Strategic Review)는 2007~2011년에 캐나다 전수 프로그램에 대해 수행되었으며, 2012년 이후 특정 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로 지출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3 ————— 우리나라의 시사점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성과지향적 재정운용을 통해 재정을 효율화하고, 이 과정에서 생산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향상시킨다. 또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정보시스템의 기능 개선 역시 필요하다. 이 관점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2019~2023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을 밝혔다.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현행 제도 및 재정정보시스템 문제점 분석 못지않게, 해외 사례의 시사점을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 국제기구와 외국 사례의 시사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재정성과관리의 전략적 성격 강화이다. 예산당국은 성과관리의 전략적 과제와 우선순위를 설정·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나머지 개별 부처의 재정성과관리에는 자율성을 부여하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같은 방향은 OECD, World Bank에서도 모두 강조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재정성과관리에 있어 단위가 되는 개별 프로그램·재정사업의 전주기 관리를 위해 정보 생산 및 관리 절차를 체계화하고 이를 정보자산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성과정보의 정확성을 관리하는 한편, 접근성을 강화하고 대국민 공개 역시 확대하여 재정성과정보의 활용을 증진해야 한다. 마지막은 이를 위한 재정정보시스템의 기능 개선이다. 재정성과관리제도 변화 및 실효성 증대에 맞추어, 재정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하는 재정성과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정사업 전 과정에서 시스템에 입력되는 재정성과정보의 품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참고 문헌

- OECD. (2019). 『OECD Good Practices for Performance Budgeting』. OECD: Paris.
- Moynihan, D. and I. Beazley. (2016). 『Toward Next-Generation Performance Budgeting』. World Bank Group: Washington, DC.
- 미국 관리예산처. (2020). A 『Budget for America's Future』. OMB.gov
- 미국 관리예산처. (2019). 『Circular A-11: Preparation, Submission, and Execution of the Budget』.
- 미국 보건복지부. (2019). 『2018 HHS Agency Financial Report』.
- 캐나다 재무위원회. (2018). 『Improving the Quality and Impact of Annual Performance Reporting』.

02

KPFIS-인사이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

: 주요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오유리 정보보호본부 사원(yuri@kpfi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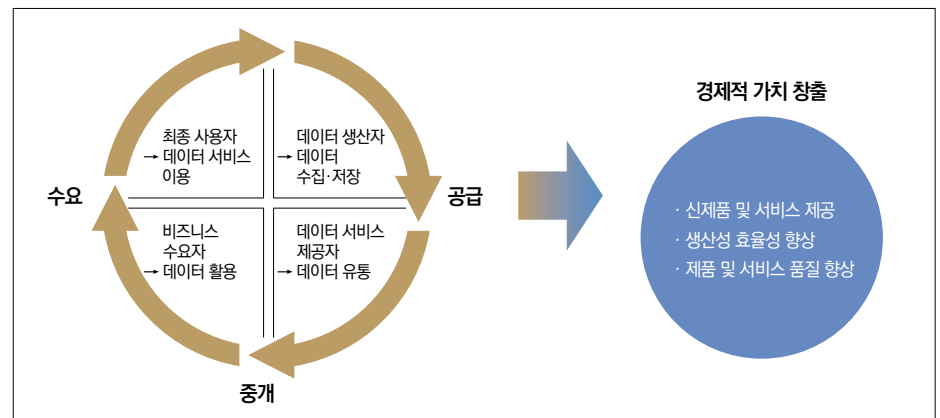
1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함에 따라 IoT 기기 등에서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가 대량 발생하고 있다. 또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데이터는 기존의 생산요소를 넘어서는 핵심 자원으로 부상했다¹. 따라서 세계는 데이터의 보유·활용·분석 능력이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데이터 경제 시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¹ 4차산업혁명위원회(2018), 「2018년 데이터산업 백서」



그림 1. 데이터 경제의 가치 창출 체계



자료: Enter the data Economy(2017, EC), The Rise of the Data Economy(2016, IBM),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2018, 4차산업혁명위원회) 재구성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은 개인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장한 대표적 기업들이다. 또한, 인텔은 칩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제조 비용의 300만달러를 절감하였고, 엡실론이나 엑시엄과 같은 데이터 브로커 기업은 다양한 고객 데이터를 수집·가공·분석하고 산업군에 따라 적합한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연간 수억달러의 매출을 기록하기도 한다. 이렇게 기업들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생산 비용을 절감하거나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며 다른 산업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². 이에 세계 주요국은 그림 2와 같이 데이터를 이용한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과 투자 확대, 제도 정비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그림 2. 주요 국가의 데이터 경제 관련 정책



자료: 4차산업혁명위원회(2018),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

우리나라도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존의 엄격한 개인정보 규제로 데이터 활용에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세계 흐름에 합류하였다. 우리 정부는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목표로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몇 년간 논의되던 ‘데이터 3법’이 올해 1월에 통과되어, 8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그렇다면 ‘데이터 3법’은 무엇이고, 어떤 점이 달라지는 것일까?

² 한국데이터진흥원(2018), 「2018년 데이터산업 백서」



2 _____ 데이터 3법의 개정 배경

우리나라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세 개의 법을 통칭하여 ‘데이터 3법’이라 한다. 개정 전 각 법률에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³를 포함한 유사·중복 조항이 다수 존재하여 기관·기업 등 수범자의 혼란⁴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함에 따라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가 주목을 받으면서 데이터의 보호에서 안전한 활용으로 규제 혁신이 요구되었다. 이에 분산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개인과 기업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한 데이터 3법 개정안이 마련·통과되었다. 이를 통해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개인정보보호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³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있다.

⁴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하여 A 항공사는 행정안전부(2016.8.)로부터, B 항공사는 방송통신위원회(2016.10)로부터 각각 조사와 제재를 받았다.

표 1.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주요 개정 내용

법령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 유사·중복 규정 정비 · 감독기구 일원화 및 권한 강화 · 데이터 신사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 활성화 지원 · 개인정보보호 강화	· 가명정보 도입: 정보주체 동의 없이 데이터 활용 근거 마련 · 보호 측면: 가명정보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특정인 식별 금지 · 처벌: 특정 개인 식별 목적의 정보처리 시 매출액 3%, 자본금의 3% 또는 4억원 과징금
신용 정보법	· 유사·중복 규정 정비 ·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 기반 마련 ·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 · 개인정보보호(신용정보) 및 신용정보주체 권리 강화	· 가명정보 도입: 신용정보주체 동의 없이 데이터 활용 근거 마련 · 마이데이터: 본인 신용정보관리업 도입 · 처벌: 가명정보의 고의적 재식별 시 전체 매출액의 3% 과징금, 가명정보 관련 과태료 규정 신설 (최대 5천 만원)
정보 통신망법	· 유사·중복 규정 정비	· 거버넌스 정비: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감독 기능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각 법률안 정리, 배영임, 신혜리(2020), 「데이터3법, 데이터 경제의 시작」

3_____ 데이터 3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

데이터 3법의 핵심은 ①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 명확화 ② 가명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 ③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④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다.

① 기존 법령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특정한 개인에 관한 정보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으면 모두 개인정보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쉽게 결합’의 기준이 모호하여 개인정보의 범위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된 법안에서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및 식별에 소요되는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판단기준을 제시하였고, 익명처리 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였다⁵.

또한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된 가명정보의 개념을 정의하여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

⁵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01), “인공지능시대와 데이터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② 가명정보는 안전조치 하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을 위해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표 2. 개인정보의 관련 개념과 활용 가능 범위

	개념	활용 가능 범위
개인정보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정보	사전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받은 범위 내 활용 가능
가명정보	추가정보의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	다음 목적에 동의 없이 활용가능 (EU GDPR 반영) ① 통계작성(산업적 목적 포함) ② 연구(산업적 연구 포함) ③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등
익명정보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복원 불가능할 정도로) 조치한 정보	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활용

자료: 금융위원회(2020.01),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2020.7월부터 시행됩니다.”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가명·익명 처리 데이터 예시로 표 3을 제시하였다.

표 3. 개인정보(원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예시

개인(원본)정보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직장전화	자택전화	주소	직업	가족	예금 평균잔액	대출액
홍길남	67년 1월 3일	010-9999-3333	055-747-0088	055-2345-6789	경남 창원시 마산구 합포동 123	국회의원	배우자 아들1 딸1	4,567,900원	45,896,789원

가명정보 예시									
※ 사실상 해당 정보만으로는 개인식별 불가능. 다만, 핸드폰 번호 암호화 알고리즘을 알면 복원가능하므로 가명정보에 해당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직장전화	자택전화	주소	직업	가족	예금 평균잔액	대출액
- * 삭제	- * 삭제	ajeekc93 * 암호화	- * 삭제	- * 삭제	경남 창원시 마산구 * 범주화	- * 삭제	배우자 아들1 딸1	4,567,900원	45,896,789원

익명정보 예시									
※ 그 자체로,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도 개인을 식별할 수 없음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직장전화	자택전화	주소	직업	가족	예금 평균잔액	대출액
- * 삭제	- * 삭제	- * 삭제	- * 삭제	- * 삭제	경남 창원시 마산구 * 범주화	- * 삭제	가족 3명	400만원 ~5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자료: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데이터 경제 청신호.(보도자료)

- ③ 데이터 활용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가명정보 처리 및 데이터 결합 시 안전조치⁶ 의무를 부과하고, 특정 개인의 식별을 금지하였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 외에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 ④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같은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관된 정책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⁶ 가명정보 복원을 위한 추가정보는 별도 분리보관 및 제3자 제공을 금지하고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생성 시 바로 처리를 중단하거나 파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그림 3. 데이터 3법의 핵심 내용

개인정보의 판단기준 명확화	· 개인정보의 판단기준을 명시 · 익명정보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시
가명정보 제도화	·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 · 가명처리한 정보는 산업 목적의 연구를 위해 처리 가능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 정보 활용 시 준수해야 할 안전조치 의무 명확화, 벌칙 등 규정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

4 _____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재정정보의 활용 준비

데이터 3법의 개정에 따라 가명정보 처리가 가능해지면서 재정정보 공개에 대한 요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제공할 수 없던 재정정보가 가명·익명처리 후 제공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에 정보 제공에 대한 기준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재정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가치 창출 가능성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다른 기관·기업의 데이터와 재정정보를 결합하여 다양한 통계 분석 및 연구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명처리 및 관련 규제사항 준수를 위한 내부 규정 정비와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마련, 관련 전문가 육성 등의 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이권일(2020), 「일반에게 공개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 김정현(2020),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 이기용(2019),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기술 동향」
- 김영호, 김인석(2019), 「개인정보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정보보호정책 개선에 관한 연구: 금융회사 개인정보 오남용 모니터링 결과 중심으로」
- 송미정, 김인석(2019), 「유럽 PSD2 시행에 따른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정책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 연구」
- 정일영(2018),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국내 데이터 제도 개선방안」
- 권현영(2019), 「데이터 규제 3법 개정 전망과 과제」
- 한국인터넷진흥원(2018.11), 「대한민국 혁신성장, 데이터경제에서 길을 찾다」

①

CES 2020으로 보는 자율주행 센서 및 AI 칩 주요 동향과 향후 지원 방향

정구민 국민대학교 전자공학부 교수(gm1004@kookmin.ac.kr)



들어가며

CES 2020(CES: Consumer Electronics Show, 세계가전전시회)은 2020년대의 산업 진화를 예상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신기술, 관련 제품들, 서비스가 선보였다. 특히 자율주행 센서와 AI 칩 분야에서는 많은 업체들이 관련 제품을 내놓으면서, 차세대 먹거리인 자율주행 산업과 인공지능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주요 업체들의 노력을 보여 주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스타트업들이 관련 분야에서 시장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해외 시장에도 진출하고 있다. 하지만, 충분히 시장에서 검증되어야 하는 자율주행 센서 분야와 완제품을 고려해서 성장해야 하는 AI 칩 분야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한 발 뒤처져 있는 게 사실이다.

우리나라 산업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두 분야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이 글에서는 자율주행 센서와 AI 칩의 두 분야에 대한 CES 2020의 주요 전시 및 동향을 정리하고 우리나라 스타트업 지원 방향에 대해서 정리해 본다.

표 1. 관련 분야의 우리나라 주요 스타트업

분야	주요 업체
라이다 센서	SOS랩, 카네비컴
레이더 센서	스마트레이더시스템, 비트센싱
AI 칩	UX팩토리, 퓨리오사AI

자율주행 센서 주요 동향

자율주행차를 위한 자율주행 센서로는 라이다, 카메라, 레이더 센서가 사용되고 있다. 레이저를 이용해서 3D로 주위를 인식하는 라이다 센서는 연구용 자율주행 차량에 자율주행

핵심 센서로 쓰이고 있다. 비싼 가격과 날씨 조건에 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주요 자동차사에서 판매하는 자율주행 2단계 차량에는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다. 라이다 센서는 현재 아우디의 일부 차량에만 상용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레이더 센서는 전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날씨에 강한 특성을 갖고 있다. 주요 자동차에 상용화되어 있는 레이더 센서는 물체의 유무와 속도를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이다. 최근 주요 레이더 업체들은 주위를 3D로 인식할 수 있는 이미지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다. 라이다 센서에 비해서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고 날씨 조건에 강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CES 2020의 라이다 센서 측면에서는 차량 부품 업체 1위인 보쉬가 라이다 센서 양산을 발표하기도 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중국, 독일, 이스라엘 등 여러 나라의 많은 스타트업들이 라이다 센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에서는 SOS랩과 카네비컴이 관련 센서를 전시했다.

상대적으로 이미지 레이더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은 적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스마트 레이더시스템, 비트센싱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바야, 알비 등이 이번 CES 2020에서 이미지 레이더 센서를 발표했다.

2020년 3월 발표된 구글 웨이모의 5세대 자율주행 센서 시스템에도 라이다, 카메라, 레이더의 자율주행 센서가 장착되어 있다. 구글 웨이모는 라이다 센서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웨이모의 5세대 자율주행 센서 시스템에는 이미지 레이더가 사용된 점도 특징이다.

자율주행 센서의 핵심인 라이다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해외 선두 업체들에 비해서 격차가 여전히 큰 편이다. 다만, 이미지 레이더 분야에서는 스마트레이더 시스템이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미국의 시장 조사기관인 윌(Yole)은 2019년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스마트레이더 시스템이 이미지 레이더 기술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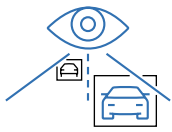


그림 1. CES 2020, 우리나라 스마트레이더 시스템의 이미지 레이더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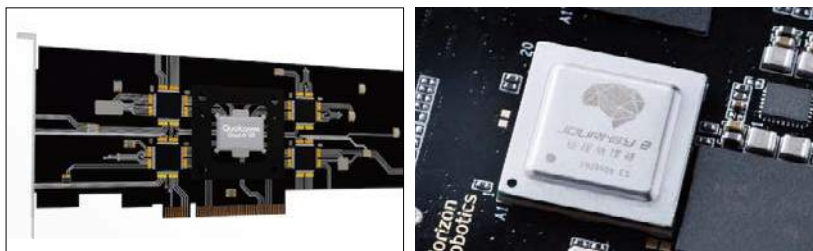
AI 칩 주요 동향

영상 인식에서는 인공지능이 이미 사람의 인식률을 넘어섰다. 다만, 성능이 좋은 인공지능을 기기에서 상용화하기에는 가격 측면의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기기에 장착하기 위한 AI 하드웨어는 최소 수십만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고 전력 소모가 적은 AI 칩의 개발이 최근 AI 시장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이세돌 9단과 바둑 대결을 벌였던 알파고 뒤에도 TPU라는 구글의 AI 칩이 있었다. 기존 GPU 기반의 PC를 사용하는 대신에 AI 칩을 장착해서 크기와 전력 소모를 크게 줄였다. CES 2020에서는 여느 해보다 더 많은 AI 칩이 전시되었다. 퀄컴의 클라우드용 AI 칩을 비롯해서, 중국 호라이즌 로보틱스의 AI 칩, 아마존 알렉사를 지원하는 저전력 음성인식을 위한 신티안트의 AI 칩, 젠-피(Zen-P)의 로봇 내비게이션용 AI 칩 등 다양한 AI 칩이 큰 관심을 끌었다. CES 2020에서 발표된 AI 칩들은 앞으로 클라우드, 자율주행차, 로봇, 인공지능 스피커, AI 탑재 가전 등 다양한 기기들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AI 칩 분야는 우리나라가 크게 뒤쳐진 분야이다. 2017년 가을에 애플과 화웨이는 자체 AI 칩을 적용한 스마트폰을 발표했다. 삼성이 AI 칩을 개발하여 스마트폰에 탑재한 것은 2019년 봄이며, LG도 자체 AI 칩을 2019년 봄에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주요 AI 칩 스타트업인 UX팩토리와 퓨리오사AI는 모두 2020년 제품이 발표될 예정으로 대기업이나 스타트업 모두 시장에서 크게 늦어있는 상황이다.

그림 2. 미국 퀄컴과 중국 호라이즌 로보틱스의 AI 칩



자료: 각 사

2019년에 중국 호라이즌 로보틱스와 우리나라의 퓨리오사AI가 투자받은 금액을 비교해 보면 상황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SK그룹은 CES 2019 이후 SK차이나 중심으로 중국 자동차사와 협력하여 호라이즌 로보틱스에 약 7000억원을 투자한 바 있다. 퓨리오사AI는 지난해 11월 네이버로부터 80억원을 투자 받았을 정도로 투자 금액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정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재정 지원 방향에 대한 고려

앞으로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스타트업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부품업체, 자동차사 연계를 통한 생태계 조성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동차에 탑재되기 위해서는 성능과 가격뿐만 아니라, 수명, 신뢰성, 내구성, 등이 모두 보장되어야 하는 만큼 부품업체, 자동차사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 즉, 믿을만한 부품업체나 자동차사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신뢰성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자율주행 센서 스타트업과 부품업체, 자동차사를 묶어서 실증 단계의 자율주행 검증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스타트업의 자율주행 센서를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주어서, 향후 해외 시장 수출이 가능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자율주행용 센서를 일반 산업용 응용에 적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관련 센서의 응용 영역을 발굴하고 다양한 기기 및 서비스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AI 칩은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측면의 지원이 필요하다. 먼저, 반도체 설계업체(팹리스)가 쉽게 칩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많은 투자비가 필요한 칩셋의 특성을 고려해서 설계 후 제품까지 쉽게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AI 칩의 수요 기업과의 연결이 중요해진다. 가전 기기, 스마트폰, 자율주행차, 클라우드 등 AI 칩 수요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AI 응용 영역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새로운 AI 관련 시장의 발굴과 지원도 필요해 보인다.

표 2. 주요 지원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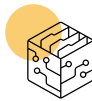
주요 지원 방향	자율주행 센서	AI 칩
	자율주행 시범 운행 검증 지원	칩 제작 지원
	부품사, 자동차사 연계 생태계 조성	AI 칩 수요 기업 연결 지원
	산업용 응용 분야 발굴 및 지원	새로운 응용 영역 발굴 및 지원

정리 및 시사점

자율주행 센서와 AI 칩은 향후 미래 먹거리를 위한 핵심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관련 산업이 주요 국가에 비해서 뒤처져 있는 만큼 많은 투자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향후 대대적인 상용화를 고려할 때, 개별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원천 기술 개발과 생태계 조성에 대한 지원이 요구된다. 자율주행 센서와 AI 칩은 앞으로 미래산업을 열어갈 핵심 기술로 평가되는 만큼, 적절한 투자와 협력으로 우리나라 업체들이 미래 시장을 주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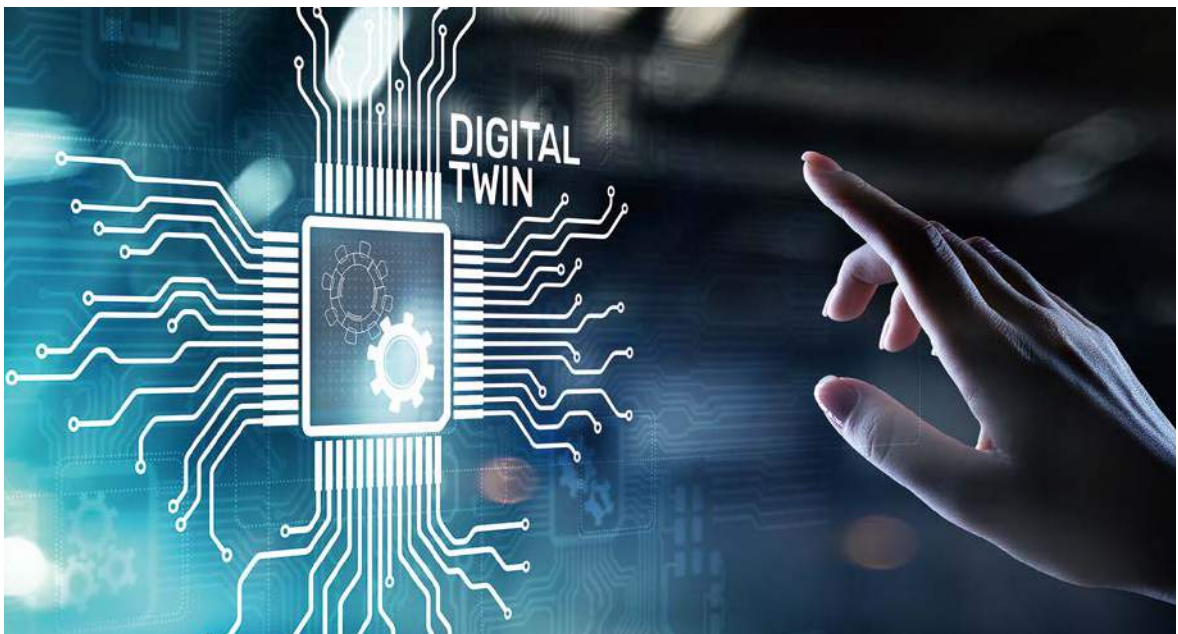
미래산업의 융복합 플랫폼, 디지털 트윈의 이해와 지원방안

박상언 경기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supark@kgu.ac.kr)



디지털 트윈의 이해

영화 '아이언맨' 시리즈를 보면 토니 스타크가 홀로그램을 보면서 다양한 작업을 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다. '아이언맨1'에서는 슈트를 홀로그램으로 보면서 이것저것 조정해보는 장면이 간략하게 나오고, '아이언맨2'에서는 1974년에 열린 스타크 엑스포 장소를 스캔해서 홀로그램으로 만든 후, 보행자 도로, 나무, 주차장 등을 없애고 다른 모습으로 구조화해서 새로운 물질을 발견하는 장면이 나온다. '아이언맨3'에서는 사고현장을 홀로그램으로 재구성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는 장면이 나온다. 이후 홀로그램을 사용하는 장면은 아이언맨의 트레이드마크처럼 되어, 어벤저스 시리즈 등에서 계속 등장하며 보는 사람들을



매료시킨다. 많은 사람이 감탄을 하면서 동시에 먼 미래의 기술로 생각하고 있으나, 사실 이러한 영화의 장면은 디지털 트윈의 대표적인 예로 많이 언급되고 있으며 유사한 기술들이 이미 개발되기도 했다. 영화 ‘아이언맨’의 홀로그램이 실제 있는 장소나 물체를 모델링하여 만들어졌으며 이러한 홀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함으로써 가장 좋은 안을 찾아간다는 점에서, 디지털 트윈의 특성을 정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디지털 트윈의 개념은 2002년 미시간대의 마이클 그리브스 교수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되었으나 대중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16년 GE(General Electric)에 의해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GE는 디지털 트윈의 산업 분야 적용에서 가장 앞선 기업 중 하나이기도 하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세계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사물이나 시스템, 환경 등을 가상 세계(Digital World)에 동일한 형태, 즉 쌍둥이(Twin)로 구현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함으로써 최적의 해를 도출할 뿐 아니라, 도출된 해에 따라 현실 세계를 제어하는 기술을 말한다.

디지털 트윈에 대한 전망

듣기만 해도 충분히 매력적인 디지털 트윈 기술은, 가트너(Gartner)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연속 주목해야 할 10대 전략기술에 선정할 정도로 유망한 미래기술인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기도 하다. 가트너는 2021년이면 벌써 전 세계 대기업 중에서 절반이 디지털 트윈을 사용하며, 생성된 디지털 트윈이 수십억 개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2019년에 발행된 마켓스 앤 마켓스(Markets and Markets) 보고서에서 디지털 트윈 시장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37.8%를 보이며 폭발적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25년의 예상 시장 규모는 35.8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다만 국내 시장에서는 세계 디지털 트윈 시장에 비해 낮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현재 디지털 트윈 시장의 주도 기업들이 대부분 글로벌 기업이고 국내 기업은 아직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융복합 플랫폼으로서의 디지털 트윈 특성

디지털 트윈의 정의와 단계에 따라 관련 기술을 보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먼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물리적인 정보들을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디지털

트윈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된 배경에는 IoT의 급격한 발전이 있다. IoT를 구성하는 다양한 센서를 통해서 디지털 트윈의 구현에 필요한 수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둘째로 현실세계와 가상세계 사이의 데이터 고속 전송 및 일치화와 관련한 기술이다. 많은 경우 디지털 트윈은 두 세계 간 양방향의 실시간 통합 및 연결을 요구한다. 이는 실시간으로 현실세계의 상황을 파악하고 제어해야 하는 상황이 많고,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이렇게 수집 및 전송된 정보들의 효율적인 관리와 분석 및 처리를 위한 기술로, 데이터의 양이 증가할 경우 빅데이터 기술을 포함하게 된다. 넷째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함으로써 최적의 해를 찾아내는 기술이다. 이때 현실세계를 구성하는 물리적, 논리적 법칙의 정확한 구현이 매우 중요하다. 쉬운 예로, 현실세계에는 중력이 존재하지만 가상세계에는 일부러 구현하기 전까지는 중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이러한 현실세계의 법칙이 정확하게 구현되지 않는다면 시뮬레이션 결과는 신뢰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는 머신러닝, 딥러닝 등의 인공지능 기술을 필요로 한다. 다섯째는 다양한 시각화 및 분석을 통해 현실세계와 가상세계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최적해에 대한 통찰력을 갖도록 하는 기술이다. 이 단계 역시 빅데이터 분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은 가상세계에서 현실세계의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로, 도출된 최적의 해를 현실세계에 구현하기 위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정확한 구현을 위해서는 물리적인 시스템이나 환경에 대해 최대한 정밀한 제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로봇 등의 자동화시스템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 트윈은 하나의 단일기술이라기보다는 IoT, 대용량 데이터 전송,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정밀제어, 자동화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집약된 융복합 기술 및 플랫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디지털 트윈의 지원 및 확산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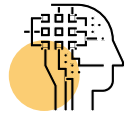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 트윈이 매우 유망한 기술인 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세계적인 전망에 비해 발전 및 성장 속도가 늦은 편이다. 이는 4차 산업혁명에서 뒤처지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디지털 트윈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해도, 일부 대기업과 같이 자체적인 개발 능력과 예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기업에는 개발 부담이 과중할 수밖에 없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디지털 트윈이 간단한 단일기술이 아닌 복합기술인 동시에 IoT와 같이 큰 규모의 인프라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즉,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기대효과에 비해 개발 및 구축 비용이 과다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트윈의 확산에 있어서는 정부 주도의 종합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현시점에서 모든 기업이 디지털 트윈을 필요로 하고 또한 구축으로 인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디지털 트윈을 적용할 수 있는 산업의 범위가 매우 넓은 것은 사실이나, 디지털 트윈이 다양한 자동화 기술들의 끝단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디지털 트윈보다 더 시급한 문제를 안고 있는 기업들이 훨씬 많을 수 있다. 따라서 우선은 디지털 트윈을 적용함으로써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인프라를 갖추어 여력이 있고 비교적 높은 수준의 스마트화가 진행되어 있으며, 다른 기술들에 비해 디지털 트윈에 대한 필요성이 높은 산업과 대상 기업들을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업 중에서 위험부담이 적고 기대효과가 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여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트윈에 적합한 사례들을 개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사례들을 지속해서 늘려 가면 이를 바탕으로 유사 분야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디지털 트윈에서는 다양한 기술들이 종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정부의 주도로 디지털 트윈의 단계와 관련 기술을 표준화함으로써 기업들의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세계적으로 여러 선진기업이 디지털 트윈 수명 주기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개발해나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이상과 같은 표준화된 기술 및 단계를 정립함으로써 한국형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산업계에서의 확산을 주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툇아보다 : 살살이 훑어 나가면서 살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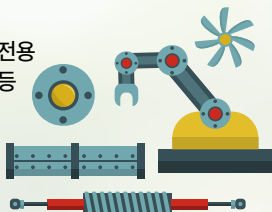
2020년 산업·기술 혁신을 위한 재정지원 방향

우상희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woosh@kpfis.or.kr)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 원년

- 핵심품목 자립화 기술개발 착수 **1.2** 조원
* 1년 내 20개, 5년 내 100개 이상 품목 자립화 달성
- 개발된 기술의 조기 상용화 인프라 구축 **0.5** 조원
- 생산능력 확충 전용 투자자금 공급 등 **0.4**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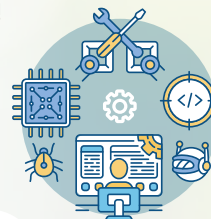
미래대비 혁신인재 4.8만명 양성

- ICT 분야 현장 중심형 실전형 인재 양성 **0.3** 조원
- BK 21+혁신 등 인재 양성 **0.1** 조원
* BK 21 혁신성장 선도형 + 6,400명(신설)
- 직업훈련 체계를 4차 산업혁명 중심으로 개편 **308** 억원
*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폴리텍 하이테크 과정 약 3천명



AI 시대로의 대전환

- DNA(Data, Network, AI) 성장 플랫폼 조성 **1.7** 조원
* 고성능 컴퓨팅 자원 지원(200개 → **800**개)
* AI 연구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626** 억원
- 3대 핵심 선도사업(BIG3) 발전 생태계 조성 **3.1** 조원
* 시스템 반도체 기업 육성 **0.3** 조원
* 바이오헬스 선도제품 개발 등 **1.3** 조원
* 미래자동차 기술개발 및 인프라 **1.5** 조원



제2의 벤처붐 확산

- 모태펀드를 통한 모험자금 **2.1** 조원 공급
* 모태펀드 출자: 0.24조원 → **0.8** 조원
- 창업기업의 스케일업 등을 위한 맞춤형 지원 **0.4** 조원
* 혁신분야 창업패키지(신규) **300** 개사
* 창업도약패키지 + **400** 개사
- R&D와 연계한 고기술 벤처창업 활성화지원 **0.2** 억원



핵심 소재·부품·장비 조기 공급안정



소재·부품·장비 핵심 기술개발 지원

- 2020년 기술개발 및 제품 국산화 촉진을 위한 투자 **(1.2조원)**
- 대·중견기업 수요에 기반한 기술개발 지원 및 혁신적 방식의 R&D 추진 **(1,186억원)**
- 빅데이터 분석으로 대체기술 개발 **(228억원)**
- 대학·출연연 보유 소재 기술의 중소기업 이전을 촉진 **(130억원)**



실증 테스트베드 확충 등 제품 상용화 지원

- 중소기업 R&D 성과물 성능 평가를 위한 공공나노랩 장비 고도화 **(723억원)**
- 소재부품지원센터(15개) 내 특화장비 지원 **(790억원)**
- 가상공학플랫폼 구축 지원 **(200억원)**



설비 확충, 해외기술 도입을 위한 투자자금 지원

- 핵심 기술개발 및 사업화, 해외기술 도입 펀드 조성 **(2,600억원)**
- 소재부품 전용 펀드 조성 (모태펀드 **1,000**억원, 혁신모험펀드 **4,000**억원)
- 양산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신용·기술보증 자금 지원 **(800억원)**
- 창업기업·신성장기반자금 등 융자 지원 **(300억원)**

D.N.A. + BIG3 집중 지원



Data, Network, AI 경제 확산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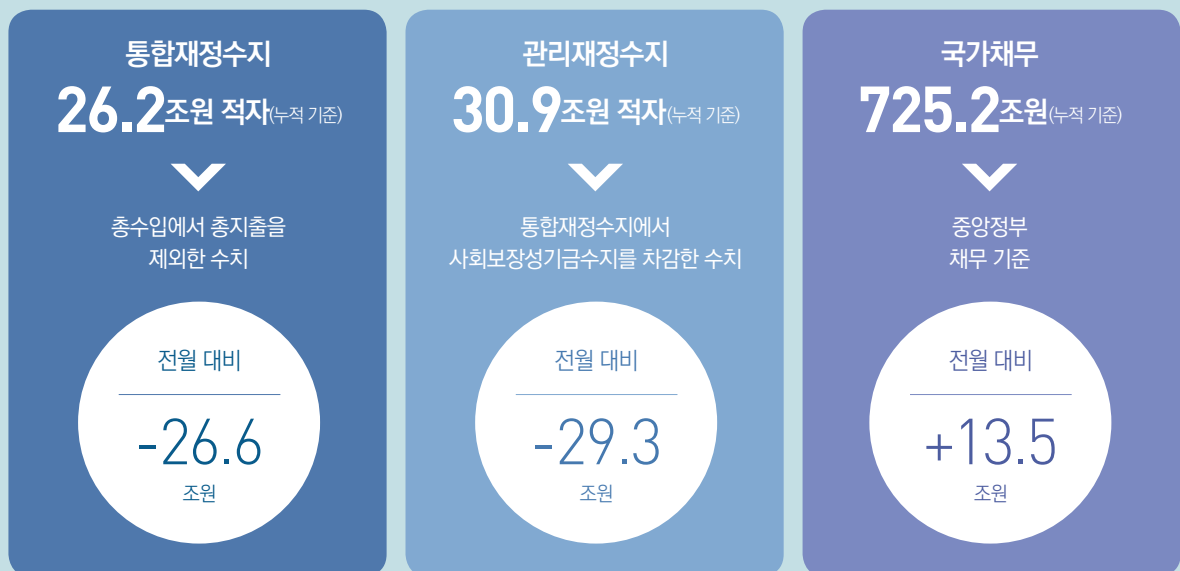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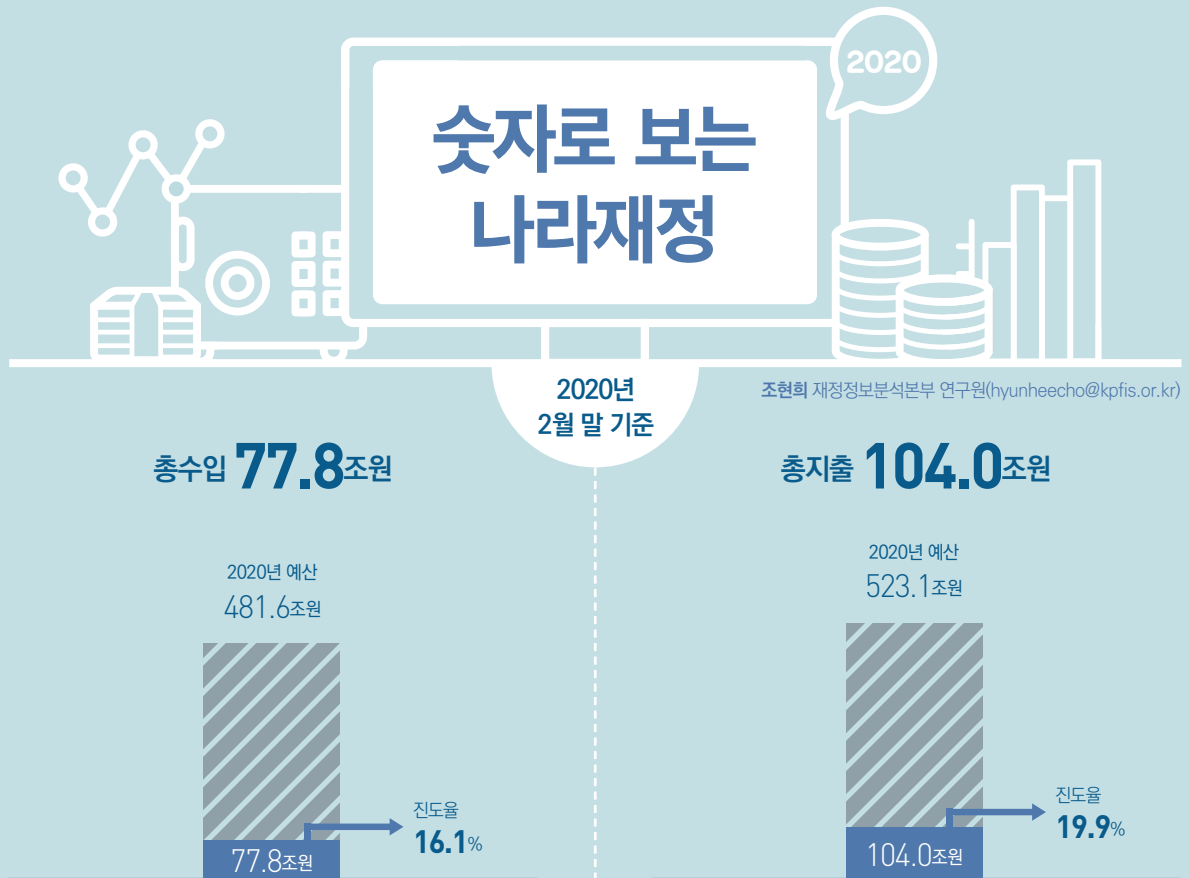
- 데이터의 생산·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플랫폼 센터 및 연계 지원 **(454억원)**
- AI 생태계를 확충하기 위한 AI 솔루션 개발, 사업화 바우처 지원 등 확대 **(762억원)**
- AI 연구 촉진을 위한 경진대회 개최 **(132억원)**
- 재난·SOC 관리 등 공공서비스 개선 분야 5G 적용 확대 **(139억원)**
- 5G 기반 동대문 VR 콘텐츠 개발 등 지원 **(779억원)**



3대 핵심사업 (BIG3) 발전 생태계 조성

- 미래차 등 주력·신산업 분야의 시스템반도체 기업 협력 지원 **(891억원)**
- 반도체 설계 지원센터 신설 및 설계 전문인력 양성 지원 **(160억원)**
- 미래유망 핵심 설계자산(IP) 확보를 위한 전용 R&D를 신설 **(90억원)**
- 바이오의약품·정밀의료기기 분야 선도제품 개발 및 지원 **(932억원)**
- 난치병 극복을 위한 진단·치료기술개발 지원 **(314억원)**
-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추진 **(150억원)**
-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및 충전소 구축 등 **(1.1조원)**
- 전기·수소차 성능을 위한 R&D에 집중 투자 **(390억원)**
- 상용화를 위한 자율차 테스트베드(K-city) 고도화 **(144억원)**





주 1) 2020년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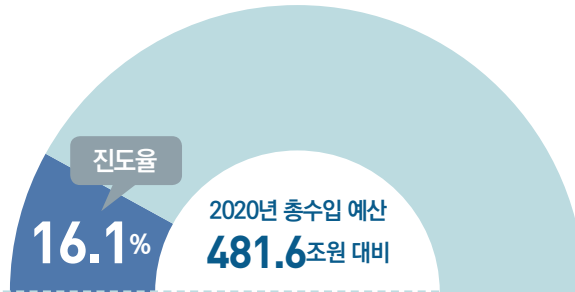
2) 구성항목별 합계는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0. 4.

총 수입

• 2020년 2월 말 기준

총수입
77.8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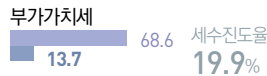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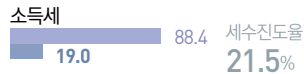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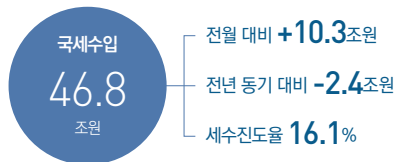
전월 대비
+26.5
조원

전년 동기 대비
+0.3
조원

주 1) 총수입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 예산 대비 당월 누계 총수입 규모의 비율을 의미

2) 2020년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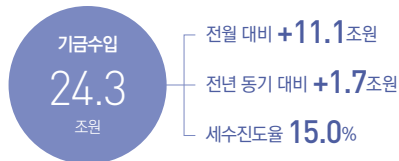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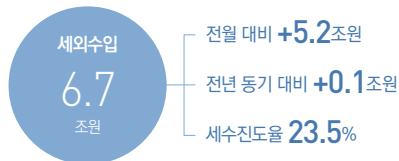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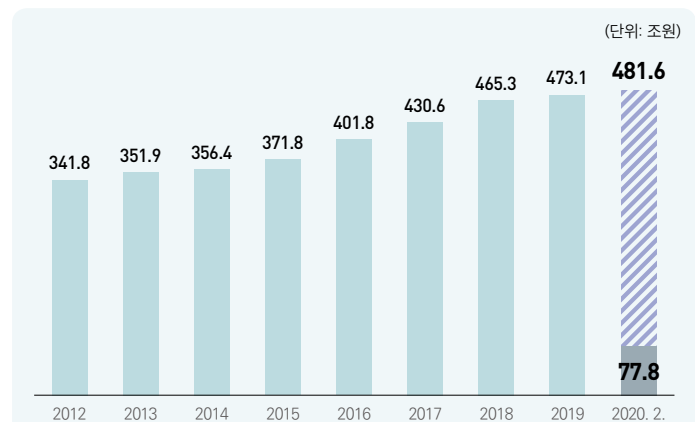
■ 2020년 예산
■ 2020년 2월

주 1) 세수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 대비 당월 누계 세입 규모의 비율을 의미

2) 2020년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 **13.9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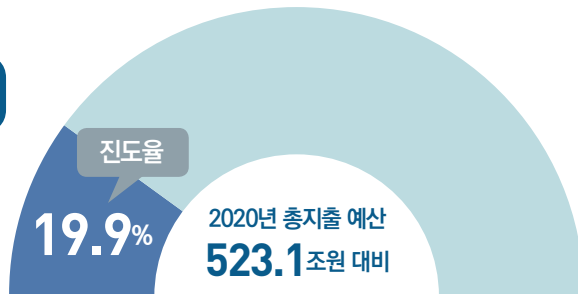
주: 2019년은 12월 말, 2020년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총 지출

• 2020년 2월 말 기준

총지출
104.0
조원



전월 대비
+53.1
조원 증가

전년 동기 대비
+14.7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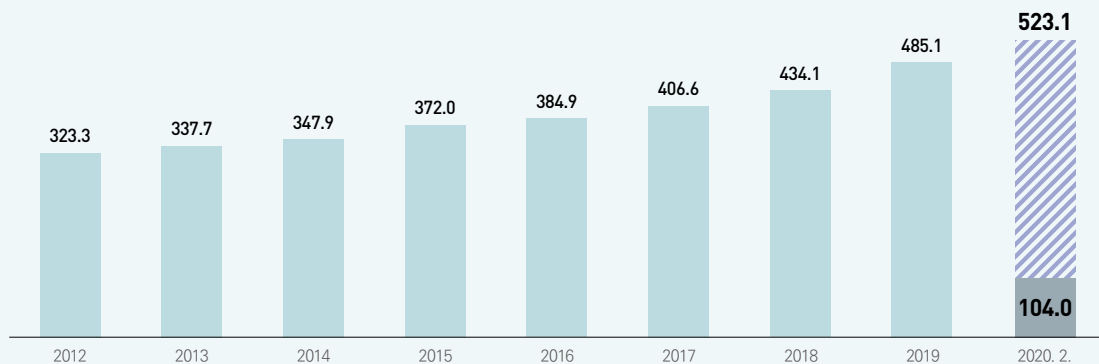
주 1) 총지출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총지출 예산 대비 당월 누계 총지출 규모의 비율을 의미

2) 2020년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단위: 조원)



주: 2019년은 12월 말, 2020년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주요 관리대상사업 집행실적

연간계획 대비 **21.7%**

307.8조원*

연간계획

66.8조원

2월 말 집행액

10.8%p

전월(10.9%) 대비
증가

*2019년 이월예산을 포함하여 연간계획 수정(+2.3조원)



상위 5개 부처

(누적 기준)

(단위: 조원, %)

	부처명	2월 실적	집행률
1	문화재청	0.5	52.0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2	43.5
3	산림청	0.7	40.1
4	산업통상자원부	3.2	39.0
5	보건복지부	7.3	35.5

주 1) 주요 관리대상사업은 45개 중앙행정기관과 39개 기금, 33개 공공기관의 인건비, 기본경비, 보전지출, 내부거래를 제외한 주요사업비에 해당(「국가재정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2) 집행률은 해당 연도의 연간 계획 대비 당월 누계 실적 규모의 비율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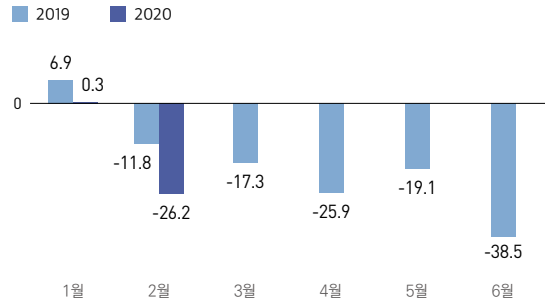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재정수지

• 2020년 2월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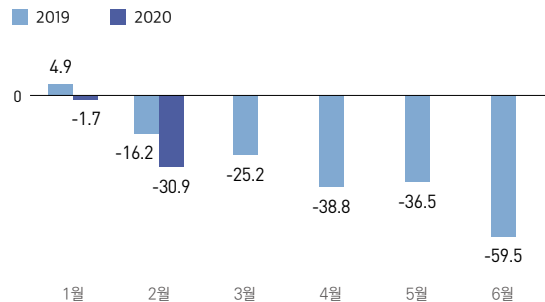
통합재정수지

26.2조원 적자



관리재정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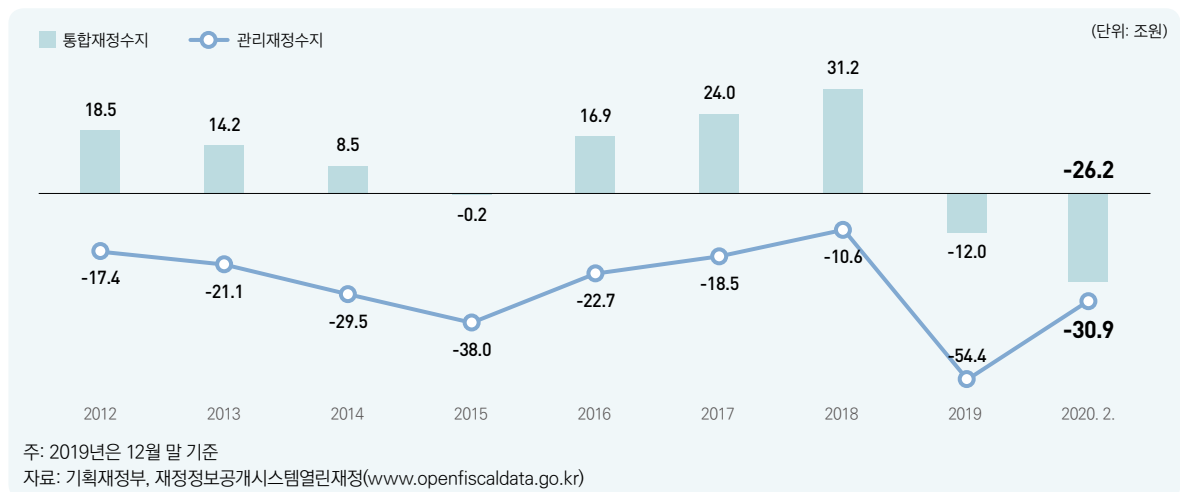
30.9조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수지

4.7조원 흑자

- 주 1)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산출
 2)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4개 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의미
 3)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를 차감하여 산출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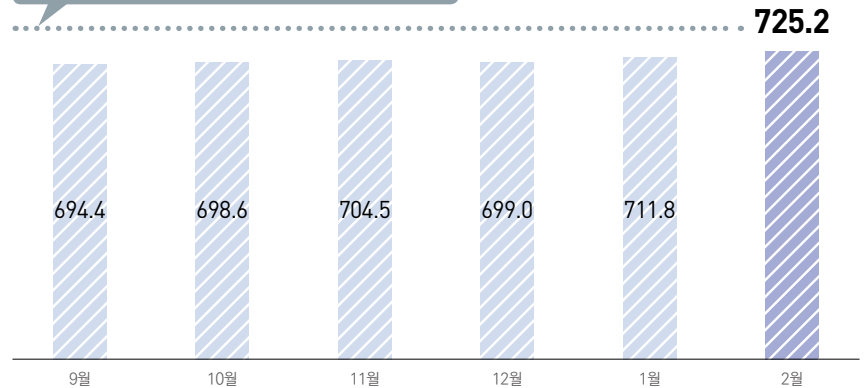
국 가 채 무

• 2020년 2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725.2조원

2020년 예산 기준 중앙정부 채무 783.5조원



전월 대비

+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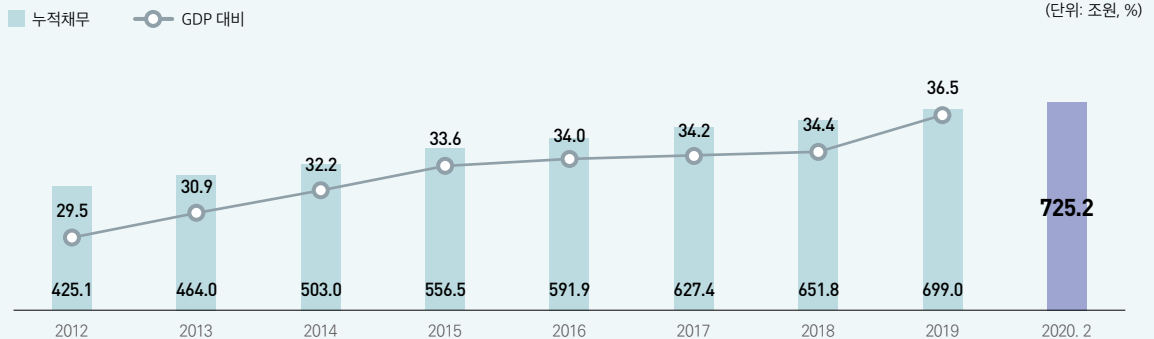
조원

전년 대비

+26.3

조원

주 1)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로 구성. 현재 지방정부 채무 통계는 결산기준으로 연 1회 산출되므로 월별 추이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공개함(2018년 국가채무는 680.5조원이며, 그중 지방정부 채무는 32.7조원임)
 2) 2020년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주 1) 중앙정부 채무 기준

2) 한국은행 신계열 GDP 기준 반영

3) 누계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은 정부의 예산, 집행, 결산에 대한 재정통계 및 시각화 자료와 재정 관련 보고서, 간행물 등 다양한 재정정보를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는 종합 재정정보공개 플랫폼입니다.

「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요 재정통계를 「열린재정」에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

전규식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gsjeon@kpfis.or.kr)

추가경정예산

정부는 최근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취약계층의 각종 피해를 보전하고 감염병 방역체계 강화, 특별재난지역(대구·경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란 국가의 예산이 성립된 이후 발생한 경제·사회적 변화로 인해 기존 예산의 변경이 필요할때,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되는 예산을 의미합니다.

이번호에서는 「열린재정」에서 찾아볼 수 있는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추가경정 예산안

재정통계 > 상세재정통계DB > 예산 > 문서자료 > 추가경정예산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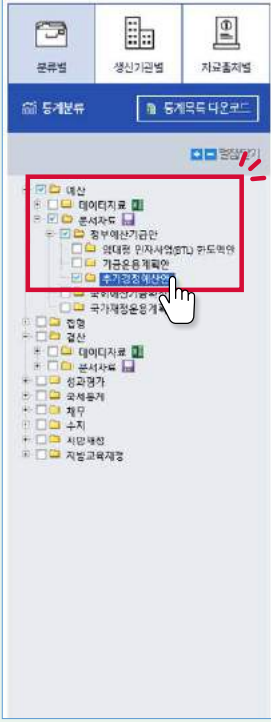
/ 추가경정예산안 첨부서류

/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 사업별 설명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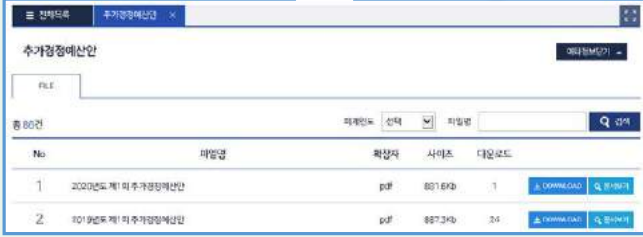
재정통계 > 상세재정통계DB > 예산 > 문서자료 > 추가경정예산안 / 추가경정예산안 첨부서류 /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 사업별 설명서(안)에서는 지금까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모든 추가경정예산안 및 관련 서류들을 볼 수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1951년부터 2020년까지 편성된 총 86회의 예산안 및 세부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재정데이터명	서비스 유형	공표 시기	생산 기간
예산안(총괄) 각 중앙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요구서와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에 심...	PDF	연간	기획재정부 예산집
예산안 첨부서류 국가재정법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제외) 국가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PDF	연간	기획재정부 예산집
예산안 개요 예산안 개요는 정부가 수립한 예산안에 관한 개요 정보로서, 예산안회 기본법...	PDF	연간	기획재정부 예산집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국가재정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정부는 대통령령의 승인을 받은 예산안을 국회에 제...	PDF	연간	기획재정부 예산집
조세지출예산서(안) 1. 조세지출예산서의 범위 2. 조세지출예산서에 기재할 내용의 요령 및 기재...	PDF	연간	기획재정부 시정집
예산안 독립기관 및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 감액규모 미유 및 의견 경부지출예산(안) 예산(안) 독립기관 및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 감액규모 미유...	PDF	연간	기획재정부 예산집
기타 예산관련문서 예산안 관련 과거년도 기타 자료입니다.	PDF	연간	기획재정부 예산집
상면지예산서(안) 정부는 국가재정법 제76조제2항 예산회계법령에 따라 예산회계법령을...	PDF	연간	기획재정부 예산집
추가경정예산안 추가경정 예산안은 용도에 정해진 예산이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간 뒤에...	PDF	수시업종	기획재정부 예산집


 ※ 추가경정예산안을 클릭한 화면입니다.



2 —————

추가경정예산 추이

복합통계 분석 > 예산 > 데이터자료 > 세출/지출 > 소관별 예산편성현황(추경)
/ 회계별 예산편성현황(추경)
/ 분야별 예산편성현황(추경) 

복합통계분석에서는 열린재정에서 제공하는 재정 관련 통계자료들을 원하는 데이터로 직접 조합해 조회·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추경과 관련된 데이터는 예산 > 데이터자료 > 세출/지출 > 소관별 예산편성현황(추경) / 회계별 예산편성현황(추경) / 분야별 예산편성현황(추경)에서 소관별, 회계별, 분야별 자료를 선택해서 볼 수 있습니다. 추경이 반영된 분야별 예산을 보고싶은 경우, 분야별 예산편성현황(추경)의 경우 대분류에서 조회를 원하는 분야를 선택하고, 소분류에서 정부안 및 국회확정 예산편성금액을 선택하여 복합통계 항목에 추가하면 아래 복합통계 항목 선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항목 선택에서 검색주기, 데이터정렬, 검색기간 등의 검색조건을 설정하면, 추경데이터가 반영된 분야별 예산편성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CHART 탭을 선택하면 추경의 분야별 추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복합통계 분석

01 • 통계 선택

데이터자료

세출/지출

소관별 예산편성현황

회계별 예산편성현황

분야별 예산편성현황

소관별 예산편성현황(추경)

회계별 예산편성현황(추경)

분야별 예산편성현황(추경)

세입/수입

입원

경산

입원장·중수입증자본(ROE·D)

02 • 항목 선택

대분류 선택

분야

교육·문화·관광

과학기술

교통

국방

국회·지방자치

농림수산

문화·관광

보건

기타

추가

삭제

03 • 항목 선택

소분류 선택

예산편성금액

정부안

국회확정

04 • 복합통계 항목 선택

영목순서 변경

선택

통계명

대분류

소분류

검색주

검색조건 설정

검색주기

데이터정렬

검색기간

조회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2032년

2033년

2034년

2035년

2036년

2037년

2038년

2039년

2040년

2041년

2042년

2043년

2044년

2045년

2046년

2047년

2048년

2049년

2050년

2051년

2052년

2053년

2054년

2055년

2056년

2057년

2058년

2059년

2060년

2061년

2062년

2063년

2064년

2065년

2066년

2067년

2068년

2069년

2070년

2071년

2072년

2073년

2074년

2075년

2076년

2077년

2078년

2079년

2080년

2081년

2082년

2083년

2084년

2085년

2086년

2087년

2088년

2089년

2090년

2091년

2092년

2093년

2094년

2095년

2096년

2097년

2098년

2099년

2100년

2101년

2102년

2103년

2104년

2105년

2106년

2107년

2108년

2109년

2110년

2111년

2112년

2113년

2114년

2115년

2116년

2117년

2118년

2119년

2120년

2121년

2122년

2123년

2124년

2125년

2126년

2127년

2128년

2129년

2130년

2131년

2132년

2133년

2134년

2135년

2136년

2137년

2138년

2139년

2140년

2141년

2142년

2143년

2144년

2145년

2146년

2147년

2148년

2149년

2150년

2151년

2152년

2153년

2154년

2155년

2156년

2157년

2158년

2159년

2160년

2161년

2162년

2163년

2164년

2165년

2166년

2167년

2168년

2169년

2170년

2171년

2172년

2173년

2174년

2175년

2176년

2177년

2178년

2179년

2180년

2181년

2182년

2183년

2184년

2185년

2186년

2187년

2188년

2189년

2190년

2191년

2192년

2193년

2194년

2195년

2196년

2197년

2198년

2199년

2200년

2201년

2202년

2203년

2204년

2205년

2206년

2207년

2208년

2209년

2210년

2211년

2212년

2213년

2214년

2215년

2216년

2217년

2218년

2219년

2220년

2221년

2222년

2223년

2224년

2225년

2226년

2227년

2228년

2229년

2230년

2231년

2232년

2233년

2234년

2235년

2236년

2237년

2238년

2239년

2240년

2241년

2242년

2243년

2244년

2245년

2246년

2247년

2248년

2249년

2250년

2251년

2252년

2253년

2254년

2255년

2256년

2257년

2258년

2259년

2260년

2261년

2262년

2263년

2264년

2265년

2266년

2267년

2268년

2269년

2270년

2271년

2272년

2273년

2274년

2275년

2276년

2277년

2278년

2279년

2280년

2281년

2282년

2283년

2284년

2285년

2286년

2287년

2288년

2289년

2290년

2291년

2292년

2293년

2294년

2295년

2296년

2297년

2298년

2299년

2300년

2301년

2302년

2303년

2304년

2305년

2306년

2307년

2308년

2309년

2310년

2311년

2312년

2313년

2314년

2315년

2316년

2317년

2318년

2319년

2320년

2321년

2322년

2323년

2324년

2325년

2326년

2327년

2328년

2329년

2330년

2331년

2332년

2333년

2334년

2335년

2336년

2337년

2338년

2339년

2340년

2341년

2342년

2343년

2344년

2345년

2346년

2347년

2348년

2349년

2350년

2351년

2352년

2353년

2354년

2355년

2356년

2357년

2358년

2359년

2360년

2361년

2362년

2363년

2364년

2365년

2366년

2367년

2368년

2369년

2370년

2371년

2372년

2373년

2374년

2375년

2376년

2377년

2378년

2379년

2380년

2381년

2382년

2383년

2384년

2385년

2386년

2387년

2388년

2389년

2390년

2391년

2392년

2393년

2394년

2395년

2396년

2397년

2398년

2399년

2400년

2401년

2402년

2403년

2404년

2405년

2406년

2407년

2408년

2409년

2410년

2411년

2412년

2413년

2414년

2415년

2416년

2417년

2418년

2419년

2420년

2421년

2422년

2423년

2424년

2425년

2426년

2427년

2428년

2429년

2430년

2431년

2432년

2433년

2434년

2435년

2436년

2437년

2438년

2439년

2440년

2441년

2442년

2443년

2444년

2445년

2446년

2447년

2448년

2449년

2450년

2451년

2452년

2453년

2454년

2455년

2456년

2457년

2458년

2459년

2460년

2461년

2462년

2463년

2464년

2465년

2466년

2467년

2468년

2469년

2470년

2471년

2472년

2473년

2474년

2475년

2476년

2477년

2478년

2479년

2480년

2481년

2482년

2483년

2484년

2485년

2486년

2487년

2488년

2489년

2490년

2491년

2492년

2493년

2494년

2495년

2496년

2497년

2498년

2499년

2500년

2501년

2502년

2503년

2504년

2505년

2506년

2507년

2508년

2509년

2510년

2511년

2512년

2513년

2514년

2515년

2516년

2517년

2518년

2519년

2520년

2521년

2522년

2523년

2524년

2525년

2526년

2527년

2528년

2529년

2530년

2531년

2532년

2533년

2534년

2535년

2536년

2537년

2538년

2539년

2540년

2541년

2542년

2543년

2544년

2545년

2546년

2547년

2548년

2549년

2550년

2551년

2552년

2553년

2554년

2555년

2556년

2557년

2558년

2559년

2560년

2561년

2562년

2563년

2564년

2565년

2566년

2567년

2568년

2569년

2570년

2571년

2572년

2573년

2574년

2575년

2576년

2577년

2578년

2579년

2580년

2581년

2582년

2583년

2584년

2585년

2586년

2587년

2588년

2589년

2590년

2591년

2592년

2593년

2594년

2595년

2596년

2597년

2598년

2599년

2600년

2601년

2602년

2603년

2604년

2605년

2606년

2607년

2608년

2609년

2610년

2611년

2612년

2613년

2614년

2615년

2616년

2617년

2618년

2619년

2620년

2621년

2622년

2623년

2624년

2625년

2626년

2627년

2628년

2629년

2630년

2631년

2632년

2633년

2634년

2635년

2636년

2637년

2638년

2639년

2640년

2641년

2642년

2643년

2644년

2645년

2646년

2647년

2648년

2649년

2650년

2651년

2652년

2653년

2654년

2655년

2656년

2657년

2658년

2659년

2660년

2661년

2662년

2663년

2664년

2665년

2666년

2667년

2668년

2669년

2670년

2671년

2672년

2673년

2674년

2675년

2676년

2677년

2678년

2679년

2680년

2681년

2682년

2683년

2684년

2685년

2686년

2687년

2688년

2689년

2690년

2691년

2692년

2693년

2694년

2695년

2696년

2697년

2698년

2699년

2700년

2701년

2702년

2703년

2704년

2705년

2706년

2707년

2708년

2709년

2710년

2711년

2712년

2713년

2714년

2715년

2716년

2717년

2718년

2719년

2720년

2721년

2722년

2723년

2724년

2725년

2726년

2727년

2728년

2729년

2730년

2731년

2732년

2733년

2734년

2735년

2736년

2737년

2738년

2739년

2740년

2741년

2742년

2743년

2744년

2745년

2746년

2747년

2748년

2749년

2750년

2751년

2752년

2753년

2754년

2755년

2756년

2757년

2758년

2759년

2760년

2761년

2762년

2763년

2764년

2765년

2766년

2767년

2768년

2769년

2770년

2771년

2772년

2773년

2774년

2775년

2776년

2777년

2778년

2779년

2780년

2781년

2782년

2783년

2784년

2785년

2786년

2787년

2788년

2789년

2790년

2791년

2792년

2793년

2794년

2795년

2796년

2797년

2798년

2799년

2800년

2801년

2802년

2803년

2804년

2805년

2806년

2807년

2808년

2809년

2810년

2811년

2812년

2813년

2814년

2815년

2816년

2817년

2818년

2819년

2820년

2821년

2822년

2823년

2824년

2825년

2826년

2827년

2828년

2829년

2830년

2831년

2832년

2833년

2834년

2835년

2836년

2837년

2838년

2839년

2840년

2841년

2842년

2843년

2844년

2845년

2846년

2847년

2848년

2849년

2850년

2851년

2852년

2853년

2854년

2855년

2856년

2857년

2858년

2859년

2860년

2861년

2862년

2863년

2864년

2865년

2866년

2867년

2868년

2869년

2870년

2871년

2872년

2873년

2874년

2875년

2876년

2877년

2878년

2879년

2880년

2881년

2882년

2883년

2884년

2885년

2886년

2887년

2888년

2889년

2890년

2891년

2892년

2893년

2894년

2895년

2896년

2897년

2898년

2899년

2900년

2901년

2902년

2903년

2904년

2905년

2906년

2907년

2908년

2909년

2910년

2911년

2912년

2913년

2914년

2915년

2916년

2917년

2918년

2919년

2920년

2921년

2922년

2923년

2924년

2925년

2926년

2927년

2928년

2929년

2930년

2931년

2932년

2933년

2934년

2935년

2936년

2937년

2938년

2939년

2940년

2941년

2942년

2943년

2944년

2945년

2946년

2947년

2948년

2949년

2950년

2951년

2952년

2953년

2954년

2955년

2956년

2957년

2958년

2959년

2960년

2961년

2962년

2963년

2964년

2965년

2966년

2967년

2968년

2969년

2970년

2971년

2972년

2973년

2974년

2975년

2976년

2977년

2978년

2979년

2980년

2981년

2982년

2983년

2984년

2985년

2986년

2987년

2988년

2989년

2990년

2991년

2992년

2993년

2994년

2995년

2996년

2997년

2998년

2999년

3000년

3001년

3002년

3003년

3004년

3005년

3006년

3007년

3008년

3009년

3010년

3011년

3012년

3013년

3014년

3015년

3016년

3017년

3018년

3019년

3020년

3021년

3022년

3023년

3024년

3025년

3026년

3027년

3028년

3029년

303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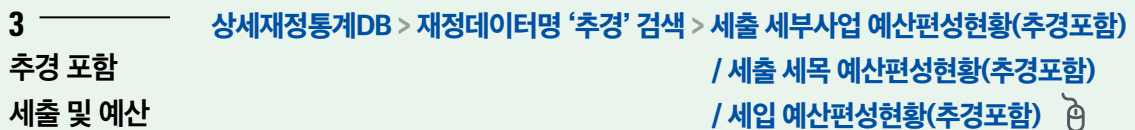
3031년

3032년

3033년

3034년

복합통계 분석



상세재정통계DB > 재정데이터명에서 ‘추경’을 검색하면 ‘추경’이 반영된 재정 데이터(세출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 세출 세목 예산편성현황, 세입 예산편성현황)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세출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추경포함)에서는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추경이 포함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으며, 소관, 회계, 계정, 분야,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본예산금액, 본예산외화금액, 추경정부안금액, 추경정부안외화금액(달러), 추경국회확정금액, 추경국회확정외화금액(달러)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세목 예산편성현황(추경포함)에서는 앞선 정보들과 함께 목명, 세목명에 대한 정보도 함께 조회할 수 있으며, 세입 예산편성현황(추경포함)에서는 소관, 회계, 계정, 본예산금액, 추경정부안금액, 추경국회확정금액과 함께 수입과목, 수입항목, 수입목명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삼세재정통계DB

상세재정통계DB

전체목록
새로운 세목 예산



본예산



예산이관별



저출처지출

동계분류
동계목록 디오로드

+ 열람/인기

- 부 예산
- 부 집행
- 부 결산
- 부 성과공감
- 부 공적통계
- 부 재무
- 부 수직
- 부 지방자치
- 부 지방공공기관

재정데이터명 추경 × Q 검색

SHEET
CHART
FILE
LINK
OpenAPI

선택 4건 (71page)

재정데이터명	서비스 유형	공표 시기	생산 기관
세출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주경포함) - 예산은 추경이 반영된 자료입니다. -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에 성립한 후에 생-	945T Open API	연간	기획재정부 예산실
세출 세목 예산편성현황(주경포함) - 예산은 추경이 반영된 자료입니다. -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에 성립한 후에 생-	945T Open API	연간	기획재정부 예산실
세입 예산편성현황(주경포함) - 예산은 추경이 반영된 자료입니다. -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에 성립한 후에 생-	945T Open API	연간	기획재정부 예산실
성지계획서(간)(추경) 추가경정 예산에 따른 수정된 성과지정표입니다.	File	추가입력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과

[illegible]추경 관련 보도자료 → 재정자료실 > 보도자료

추경 관련 성과계획서 → 상세재정통계DB > 성과계획서(안)(추경)

추경 관련 보고서 → 재정자료실 > 재정 보고서·간행물 > 예산안분석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정부의 정책 등을 찾고 싶을 경우, **재정자료실 > 보도자료**에서 ‘추경’을 검색하면 총 97건의 추경 관련 정부의 보도자료를 검색 및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경정 예산에 따른 수정된 성과계획서도 조회할 수 있는데, **상세 재정통계DB > 성과계획서(안)(추경)**으로 들어가면, 총 148건의 소관별 추경성과계획서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자료실 > 재정 보고서·간행물 > 예산안분석**에서 ‘추경’을 검색하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5건의 추경 예산안분석 보고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총 97건			주제	검색
제목	첨부	담당부서	등록일자	조회
[보도해원] 2020. 2. 25(화) 동아일보 "10조 안...		예산정책과	2020-02-25	18
[보도참고]홍남기 부총리, 주경이 조속한 통과...		예산정책과	2019-07-24	18
세노자 법무처 수경 11개식		예산관리과	2019-06-21	13
제4차 범정부 추경 TF 개최		예산관리과	2019-05-28	12

상세재정통계DB				
전체목록	성과계획서(안)...			
성과계획서(안)(추경)				
FILE				
총 148건	회계연도	선택	파일명	검색
No	파일명	확장자	사이즈	다운로드
1	2019년도 추경성과계획서-여성가족부	pdf	2.3Mb	5
2	2019년도 추경성과계획서-경찰청	pdf	3.3Mb	3
3	2019년 추경성과계획서-환경부	pdf	35.9Mb	4

월간재정동향	월간나라재정	예산(부)안심리	예산안분석	재정재정동향	경제동향
IMF	OECD	부담금운용현황	기금운용평가결과	재정사업자율평가	기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20 예산안분석 추경

국회예산정책처 2020-03-11

< 차례 >

제1차 개요 및 총평
I. 개요
II. 총평

제2차 위원회별 분석
I. 기획재정부
II. 기획재정부
III. 기획재정부
IV. 기획재정부
V. 산업통상자원부

바로가기

총 5건			주제	검색
번호	제목	출처	발간일자	
5	2020 예산안분석 추경	국회예산정책처	2020-03-11	
4	2019 예산안분석 추경	국회예산정책처	2019-06-24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데이터 분석 결과, 한 달 동안 '사전투표'의 언급량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선거', '투표', '총선' 등이 연관어로 도출되었듯이,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호에서는 국민의 뜻이 선거에 반영되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 관리를 위한 재정 지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서영훈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youngseu@kpfis.or.kr)

이달의 이슈키워드

사전투표



연관어

선거

투표

총선

국회의원

시험

투표소

선관위

공무원

전문가

국민

재외국민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선

우리나라의 선거 관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963년에 설치된 국가기관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 선거관리 업무를 통해 공직선거¹ 및 위탁선거²를 관리한다. 정당사무관리 업무로 정당에 관한 감독사무 및 정당발전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정치자금사무관리를 통해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 후원회 설립 및 운영 상황, 정치자금 사무처리 및 운영 상황 등을 감독하고 있다.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민주주의 해외전파 등을 통해 민주시민정치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헌법」 제114조 1항에 따라 설치된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 국회·행정부·법원·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 또는 정치에의 관여를 금지하여 중립성을 보장하고, 헌법과 법률로 임기와 신분을 보장하여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총 9명으로 구성되는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으로 구성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헌법상 독립기관은 예산 편성 시 「국가재정법」 제40조에 따라, 독립기관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또한, 예산의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독립기관장과 협의하여 편성해야 한다. 만약 협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감액하고자 할 때는 국무회의를 통해 독립기관장의 의견을 구해야 하며, 그 규모 및 이유, 감액에 대한 독립기관장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2020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

2020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신뢰를 공고히 하는 선거 사무를 통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선거의 공정한 관리 프로그램의 예산은 4,519억원 규모이다. 주요 단위사업으로 공직선거관리(3,399억원), 정당발전지원(925억원), 시민교육 및 공명선거 정착(184억원), 선거관리지원(11억원) 등이 있다.



¹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 등을 의미한다.

² 국민투표, 위탁선거,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 등을 의미한다.

선거의 공정한 관리 프로그램 예산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0년도 세출예산 사업설명자료 재구성

공직선거관리

공직선거관리의 주요 사업으로 국회의원선거 관리 사업, 선거보전금 사업, 재외선거 관리 사업 등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 관리 사업(2,267억원)을 통해 2020년 4월 15일에 시행되는 제21회 국회의원선거의 성공적인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선거보전금 사업(1,018억원)은 공직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거공영제³의 일환으로 「공직선거법」 제122조 2항에서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춘 정당후보자에 대하여는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을 보전하고 있다. 재외선거 관리 사업(84억원)은 재외선거 관리·운영을 위한 위원회의 운영, 신고·신청 접수, 운영 관리 등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또한, 재외선거 실시에 따라 TV, 라디오, 인쇄물 등을 통한 계도 홍보 및 사이버 예방 단속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재외선거관 운영을 위한 파견에 따른 업무경비를 지원한다.

정당발전지원

정당발전지원을 통해 정당이 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고 정책정당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당보조금 사업(922억원)은 정당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치자금법」 제25조, 제27조에 따라 정해진 보조금 배분 대

³ 선거공영제는 선거에 관한 경비 중 일부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 선거비용을 경감하고,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는 선거제도를 말한다.

상 정당과 각 대상 정당의 보조율에 따라 지원된다. 정당사무지원 사업(3억원)은 정당활동 공개 등을 통한 대국민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정치·선거제도 연수 기회 부여 및 정당·후원회 운영 지원 등으로 정당발전과 정당정책의 기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시민교육 및 공명선거 정착

시민교육 및 공명선거 정착의 주요 사업으로는 위법행위 예방활동 사업, 민주시민의식 함양지원 사업 등이 있다. 위법행위 예방활동 사업(102억원)은 정치관계법⁴ 위반 행위에 대한 정황 파악, 예방·안내 활동 및 조사로 공명선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기부행위 근절,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 예방 등을 통해 정치풍토의 개선 및 정치자금회계 투명성을 제고한다. 민주시민의식 함양지원 사업(33억원)은 선거정당 관계자, 유권자 등의 연수를 실시하여 성숙한 선거·정치 문화를 정착한다. 이를 통해, 유권자에게 주권의식 및 건전한 민주시민의식의 함양을 지원한다. 또한, 국제 심포지엄, 국내·외 교류·협력 등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선거관리지원

선거관리지원의 주요 사업으로 선거방송토론, 인터넷 심의 기반 조성, 선거여론조사 심의 등이 있다. 선거방송토론 사업(5억원)은 선거방송토론의 공정한 주관·진행을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는 사업이다. 정책토론회 개최를 통해 정당의 정견·정책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유권자에게 정당 간 정책을 비교·평가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또한,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⁵를 실시하여 민주시민의 토론 문화 기반을 조성하고 토론제도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터넷 심의 기반 조성 사업(3억원)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불공정 인터넷 선거보도 예방 및 피해정당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통해 공정선거보도 분위기를 조성 및 지원한다. 선거여론조사 심의 사업(3억원)은 언론매체의 여론조사 관련 기사, 보도 내용을 감시하고 선거여론조사의 원자료 분석을 통해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기준」의 위반여부를 단속·적발하여 깨끗한 선거여론조사 환경의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불법 선거여론조사를 조사하는 한편, 정당·언론사·여론조사기관 등에 법·기준의 개정사항에 대한 안내 활동 및 협조 체계의 구축을 통해 선거여론조사 환경의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⁴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을 의미한다.

⁵ 전국대학생토론대회 및 전국고등학생토론대회를 통합하여 개최한 대회이다.

코로나19 감염증의 광범위한 확산이 생산활동 중단, 소비 감소, 교역 감소 등 각국 경제에 심대한 타격으로 이어지고 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원인불명의 유행성 폐렴으로 처음 발견된 이 질병은 인접한 우리나라에서 2월 말~3월 초 최대의 확산세를 나타냈으며, 현재 미주와 유럽에서도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다. 4월 13일 기준, WHO에 의하면 전 세계 212개 국가 및 자치령에서 집계된 확진자는 170만여명, 사망자는 10만 명 이상에 이르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각국 정부 발표 자료 및 주요 외신의 보도 내용을 종합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재정 지원 정책을 살펴보기로 한다.

장윤정 재정정보분석본부 부연구위원(yjchang@kpfis.or.kr)

‘코로나19’ 대응 주요국의 재정지원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에서는 1차로 3월 6일 83억달러(10조원)에 이르는 긴급 예산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데 이어 2차로 3월 18일 1천억달러(122조원) 규모의 두번째 긴급 재정조치가 발효되었다. 여기에는 코로나19 무료검사, 실업보험 강화, 식품 지원, 유급 병가 등을 위한 재원이 포함되어 있다. 3차로 3월 27일에는 2.2조달러(2,700조원) 규모의 경기 부양 패키지 법안이 발효되었다. 이 패키지 법안은 대기업과 지방정부 대출 지원 5,040억 달러, 가구별 재난 수당 지급 2,900억달러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3차 대책안이 통과되자마자 3차 대책의 보완 등을 포함한 4차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



Japan

일본 정부는 2월 14일 1차로 103억엔(1천억원) 규모의 긴급 예비비 지출을 결의하여 국민 수송 전세기, 크루즈선, 입국 심사 및 검역을 지원한 데 이어 3월 10일에는 2차로 4,308억엔(5조원) 규모의 긴급 재정 조치를 발표하였다. 임시 휴교로 인한 프리랜서의 소득 감소나 유급휴가 인건비 지원 2,468억엔 및 방역과 의료조치를 위한 486억엔 등이다. 이날 중소기업을 위한 1.6조엔 규모의 금융지원책도 동시에 발표되었다. 4월 7일 3차로 108.2조엔(1,200조원) 규모의 긴급 경제대책이 국무회의 의결로 발표되었다. 이 중 납세 및 사회보험료 지불 유예가 26조엔 규모, 재정지출은 39.5조엔 규모 등이다. 재정지출은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 감소한 가구에 30만엔씩 총 6조엔을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China

중국 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3월 21일까지 각급 정부에서 1,218억위안(21조원)의 자금이 전염병 예방과 구제 용도로 배정되었으며, 이중 중앙정부 자금은 258억위안(4조원)에 해당한다. 이보다 앞선 2월 20일에는 재무부와 국세청이 공동으로 6천억위안(103조원) 규모의 사회보험료·의료보험료 인하, 주택제공자금 부담 경감 방침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관영매체 보도에 따르면 3월 27일 정치국 회의에서 재정적자율 확대 방침 등이 결정되었다. 4~5월 중에는 최고결기기구인 양회에서 대규모 부양책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Australia

호주는 확진자 수나 증가세에 비해 과감한 재정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우선 3월 9일 24억호주달러(1.8조원) 규모의 보건 대책을 발표하여 코로나19 진료를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3월 12일에는 1차로 176억호주달러(14조원) 규모의 재정대응책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복지급여 수급자 1인당 750호주달러 지급 등이 포함되었다. 3월 19일에는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를 포함하는 1,050억호주달러(78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책이 발표되었고 3월 22일에는 2차로 660억호주달러(49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 확대조치가, 3월 30일에는 3차로 1,300억호주달러(99조원) 규모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계획이 발표되었다. 호주 정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발표된 대책의 총량은 3,200억호주달러(238조원)로, 호주 GDP의 16.4% 규모에 달한다.



United Kingdom

영국은 의회에 재정운용계획이 제출된 3월 11일 1차로 300억파운드(45조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책을 발표하였다.(영국 회계연도는 4월 시작된다.) 이 중 120억파운드(18조원)는 금년 예산에 반영되어 영국 공공의료체계인 NHS(National Health Service)와 근로자 등에 지원된다. 2차로 3월 17일 3,500억파운드(537조원) 규모의 대응책을 발표하였고 200억파운드의 가게 및 기업체 지원과 3,300억파운드의 대출 및 신용보증 방안이 포함되었다. 3차로 3월 20일에는 고용유지기업에 임금의 80%를 최대 2,500파운드까지 지원하는 '고용유지대책'(약 175억파운드, 27조원)과 부가가치세 납기 반년 연장(300억파운드, 46조원), 저소득층에 최대 150만원 생활수당(유니버설 크레딧) 지급(70억파운드, 11조원) 계획 등을 발표하였다. 26일에는 고용유지대책을 자영업자까지 확대(추가 90억파운드, 14조원)한다고 발표하였다.



Germany

독일 의회는 3월 25일 1,560억유로(2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하였다. 대출보증 등을 합한 대응책의 전체 규모는 7,500억유로(1,000조원) 규모에 이른다. 파인설타임즈지에 따르면 추경예산 중 1,225억에 해당하는 재정지출은 소기업과 자영업자 긴급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 500억유로, 실업수당 및 기초노령연금 등 재원 확충을 위한 77억유로, 의료보호장구 생산과 백신 개발 35억유로를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도 독일재건은행(KfW)에 기업 지원을 위한 1,000억유로(135조원)를 투입하고 경제안정화기금(WSF: World Sustainability Fund)을 통해 기업들에 4,000억유로(540조원) 규모 은행 대출 보증을 제공한다.



France

프랑스 정부는 3월 17일 450억유로(62조원)의 재정대응책을 내놓았다. 320억유로는 법인세·사회보장세 납기 1개월 연기를 위해, 85억유로는 코로나19로 무급휴직한 노동자들에 대한 2개월치 소득 보전에 투입된다. 같은 날 3,000억유로(402조원) 규모의 기업대출 지급보증 방안도 발표되었다. 2차로 4월 15일에는 대응책 규모를 1,000억유로(133조원)까지 확대하는 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Spain

스페인도 3월 17일 2,000억유로(274조원) 규모의 대응 패키지를 발표했다. 기업대출 지급보증에 1,000억유로, 백신 및 치료제 연구개발에 300억유로, 피해 기업 등에 직접지원 170억유로 등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재원 중 약 30억유로는 민간부문을 통해 조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Ita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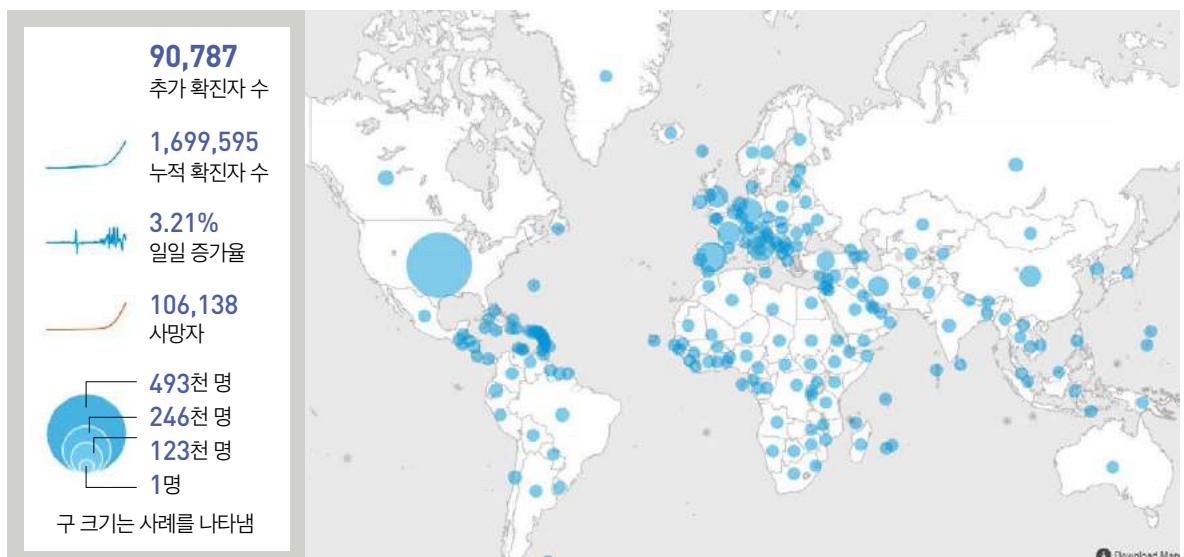
이탈리아 의회에서는 3월 16일 250억유로(34조원) 규모의 특별예산(Cura Italia decree)이 승인되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32억유로는 국가보건체계 강화에, 고용과 소득안정에 103억유로를, 가게와 소기업에 3,500유로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51억유로, 세금 납기연장 및 세제혜택에 16억유로 등이 쓰일 계획이다.

한편 EU 재무장관회의는 4월 9일 회원국 지원을 위한 5,400억유로(716조원) 규모의 구제금융 지원 대책안에 합의했다. 유로안정화기금을 통한 저리 대부 2,400억유로, 유럽투자은행의 중소기업 대상 대출보증 2,000억유로,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을 위한 실업재보험 기금 설립 지원 1,000억유로 등이다. 다만 프랑스, 이탈리아 등 9개국이 요구하였던 EU 코로나 특별채권 발행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되었다.

EU회원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대개 방역과 치료 목적의 보건·의료부문에 대한 1차 재정 지원 조치 이후, 확산세 심화로 부분적인 경제활동 중단이 불가피해지면서 1차의 10배 이상 규모에 달하는 2차, 3차 대책을 추가로 발표하는 모습이다. 여기에는 주로 재난·실업수당 등 국민소득 지원, 피해 기업 연쇄도산 방지를 위한 유동성 공급 등이 포함되어 있다.

3월 27일 G20 정상은 최초로 특별 화상회의를 열고 과감한 대규모 재정지원을 지속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IMF, OECD 등 국제기구와 경제전문가들 또한 경제·사회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신속한 대규모 재정지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만큼,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각국의 재정지원 확대 정책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림. 전 세계 확진자 수 현황(2020.4.13.기준)



자료: WHO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제공되는 정부의 공공서비스는 한 톨의 낭비 없이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운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투자사업에 민간이 참여하기도 하고,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번호에서는 공공투자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간투자사업과 예비타당성조사 운영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담당. 김상기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sgkim@kpfis.or.kr) 글. 정재림 일러스트. 강태이

국가 재정을 보완하는 민간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이란 정부예산으로 건설·운영하여 온 도로, 항만, 철도, 학교 환경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994년 민간투자사업이 시작된 후로 2018년 말까지 735개 사업이 추진되어 129.7조원의 투자가 이루어졌고, 2020년도에는 총 5.2조원에 달하는 64건의 투자가 집행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 김민석 사무관을 만나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들어봤다.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민간투자사업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의 김민석 사무관은 2009년 처음으로 기획재정부에 들어온 뒤 어느덧 10년이 넘도록 국가재정을 위해 힘쓰고 있다. 현재는 민간투자법령과 신규 민간투자방식(혼합형 민자방식) 등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은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 또는 정부가 고시한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PPP(Public-Private Partnership)사업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 방식은 추진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나뉘었다. 그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은 BTO(Build-Transfer-Operation) 방식과,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이다.

“수익형 민자방식이라고 불리는 BTO 방식은 사업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서면 인터뷰로 진행하였습니다.

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SOC)을 건설한 후 소유권을 주무관청(국가·지자체)에 이관하고, 대신 주무관청으로부터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시설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등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주된 사업 분야로는 도로·철도가 해당됩니다. 또한 임대형 민자방식이라고 불리는 BTL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권을 주무관청에 임대하고, 임대료 명목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대학시설, 병영시설, 보육시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주목할 사업방식으로, 올해 2월 10일부터 도입된 혼합형 방식이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획재정부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주축이 되어 ‘혼합형 민자방식 TF’를 통해 심여 회가 넘도록 집중적인 토론과 간담회 등을 거쳐 만든 제3의 신규 민간투자

방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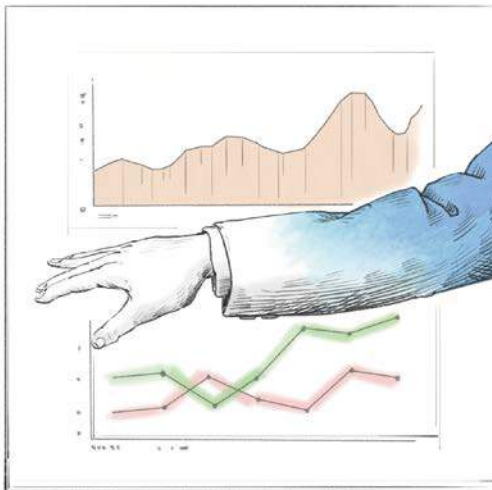
혼합형 민자방식은 시설이용자의 사용료(BTO 부분)와 국가·지자체가 지급하는 시설임대료 등 정부지급금(BTL 부분)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BTO와 BTL을 재무적으로 혼합시킨 민간투자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인프라 시설의 사용료 인하가 가능하게 되어 공공성을 강화하고, 정부지급금에 대한 국회 심의를 받아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Interview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

김민석

사무관





“1994년도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으로서 민간투자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5년 현행 법률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도입되기까지 여러 차례 변화를 거쳐왔습니다. BTO 방식 이외에 BTL 방식이 도입되었고, 정부고시사업에서 시작하여 민간제안방식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혼합형 민자방식이라는 새로운 민자방식의 도입뿐만 아니라, 민간투자대상을 법상 열거된 도로, 철도 등 53개 시설 유형에서 모든 사회기반시설로 확대하는 법률이 시행되어 또한 번의 거대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이처럼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우리나라 민간투자제도의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World Bank는 우리나라 민간투자제도가 매우 선진적이고 변화에 빠르게 대처한다는 점을 인정하여 우리나라 민자제도를 세계 6위¹로 평가한 바 있다.

민간투자사업의 발전 방향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절차는 사업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 절차 → 시설사업 기본계획 또는 제3자 공고(RFP)고시 → 협상대상자 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 →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 준공’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최근에는 재정의 사회·복지 분야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SOC 분야의 재정투자 여력은 감소하는 추세다. 그러나 기존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 수요는 증가하고 있어 재정 보완의 수단으로써 민간투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결국, 민간투자사업은 재정을 보완하여 사회기반시설의 조기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민간을 통해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사업 추진도 가능하다.

“해외 인프라 건설시장 등에 투자되고 있는 국내의 자금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서, 또한 노후화되고 있는 인프라 시설에 대응하여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민간투자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전제조건으로서 공공성, 특히 사업의 투명성은 당연히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아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와 함께 공공성·투명성 강화(실시협약의 공개 등)를 내용으로 민간투자사업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2020.1.14).

또한 올해부터는 민간투자대상이 기존 53개 유형에서 포괄적으로 대상을 규정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 시행되어 큰 변화가 이루어 집니다. 완충저류시설² 등 입법의 미비로 인해 추진이 곤란하던 사업들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시설, 친환경 자동차 환경시설, 드론 관련 시설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각종 시설 등의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므로, 민간투자 사업에서의 획기적인 양적·질적 발전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민석 사무관은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인간미 넘치고 개성 있는 동료 및 업무파트너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어서 기쁨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PPP 분야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¹ World Bank(2016). 'Benchmarking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curement 2017,

² 화재·폭발·누출 등으로 환경피해 발생 시 산업단지에서 유출되는 유해물질을 일시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시설

든든한 재정의 문지기 예비타당성조사

Interview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

이 지 우
사무관



예비타당성조사란

대규모 재정사업을 새로 추진하기 전에 그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다. 국가재정을 비효율적인 사업에 낭비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1999년부터 도입되어 20년이 넘게 운영되어왔다. 국가재정 낭비 방지가 제도의 목적인 만큼 예비타당성조사는 언론에서 '재정의 문지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실제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이 없는 사업으로 평가되는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비 투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 이지우 사무관을 만나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사업 타당성을 점검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며 그중 국비가 300억원 이상 투입 되는 신규 사업은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기 위해서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중앙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분기별로 이러한 신청을 받아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며 그중 국비가 300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공정성과 결과의 수용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다양한 가치들을 고려해 많은 사람과 소통하는 제도가 될 것입니다.

억원 이상 투입되는 신규사업에 해당하는지, 사업의 내용이 충분히 구체적인지 등을 판단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합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건설 사업을 포함하는 사회기반시설(SOC) 구축 사업 또는 건축 사업만이 조사 대상이었지만 경제 성장과 변화에 따라 대규모 재정사업이 다양해지면서 2004년에 R&D 및 정보화 사업이 포함되었고 2008년에는 사회복지 등 비정형 재정사업으로까지 확대되게 되었다. 효율적인 재정투자를 위해 예비타당성 제도가 더욱 발전해왔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부처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면 대상요건 등 검토를 거쳐 정부위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본격적으로 거치면서 대상 사업에 대해 첫째, 경제적 타당성, 둘째, 정책적 타당성 그리고 셋째, 사업유형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가 종합평가(AHP)를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최종적으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잘 운영될수록 재정투입 효과가 저조한 사업과 경제적·사회적으로 필요성이 낮은 사업 등 불필요한 사업에 예

산이 낭비되는 일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사업부처가 직접 실시한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를 보면 33건 중 단 1건만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기획재정부가 910개 사업에 대해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는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334개 사업의 추진이 유보되었습니다. 이는 36.7%의 규모로 금액으로 따지면 약 164조원입니다.”

다양한 가치를 고려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기획재정부는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도입 2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제도 개편을 추진했다. 첫 번째는 SOC 건설 사업 평가 시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을 구분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평가하게 된 점이다.

“이제 비수도권 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적 타당성보다 정책적 타당성, 지역균형발전 고려 필요성을 더 비중있게 검토할 수 있게 됩니다. 수도권 지역의 사업의 경우는 경제적 타당성과 정책적 타당성만을 집중적으로 검토합니다. 이러한 개편은 그동안 비수도권 지역이 인구 감소로 인해 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해 사회기반시설

투자가 오히려 감소하는 악순환을 겪었던 점을 고려하여 개편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책적 타당성을 평가할 때 그 사업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인가를 적극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개선했다.

“이전에는 대규모 사업추진에 따른 직접적인 고용 창출 효과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 협소한 범위의 사회적 가치만 고려하여 타당성을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창출되는 고용의 질과 주변 환경의 안전성 개선 효과, 인근 주민의 삶의 질 개선 효과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복지 등 소득이전 사업에 대한 평가 체계가 전면적으로 개선되었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비정형 사업에 대해서도 Pass or Fail 형식의 평가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가 형식이 비정형 사

업의 유연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형식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이러한 목소리를 수용하여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이제 예비타당성조사는 복지 등 비정형사업에 대해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일종의 사전컨설팅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물론 기초 조사 결과 타당성이 너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탈락된다는 점은 변함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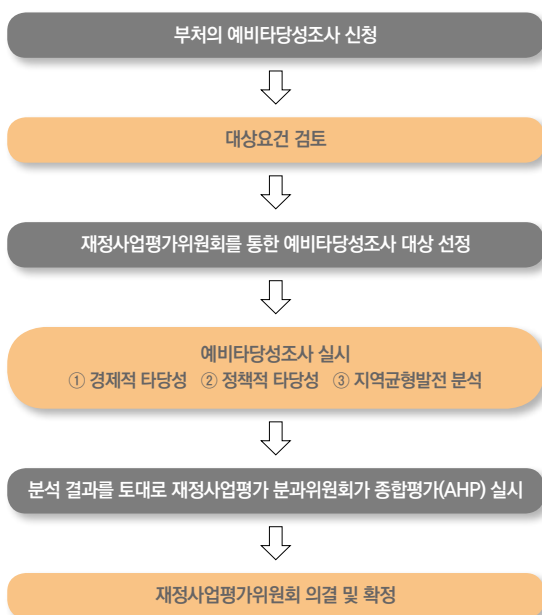
마지막으로는 기초 조사과정과 최종평가(AHP) 과정이 분리되어 운영된다는 점이다.

“그동안은 기초 조사를 수행했던 연구진이 최종 타당성평가까지 참여하였는데요. 그 결과 최종평가 결과가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에 동조되는 경향성이 나타났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해 안전이나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도 그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으면 전체적인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웠던 것이죠.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과 정책적 타당성, 지역균형발전 고려 필요성을 독립적으로 판단하도록 개편했습니다. 이제는 KDI 또는 조세재정연구원이 기초 조사를 수행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가 사업 타당성을 최종 평가하게 됩니다.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는 보다 중립적인 시각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합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더 공정하게 수행하고 결과의 수용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지우 사무관은 예비타당성조사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숫자가 설명하지 못하는 다양한 가치들을 고민하여 많은 사람과 소통하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예비타당성조사가 국가재정 낭비를 예방하고, 보다 건설적인 사업을 기획하도록 유도하는 좋은 제도로 기능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림.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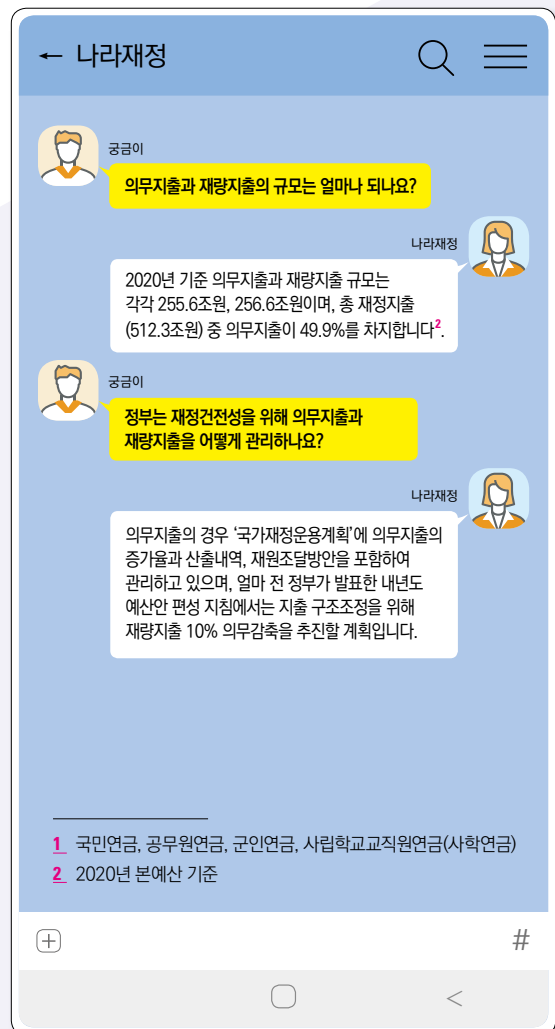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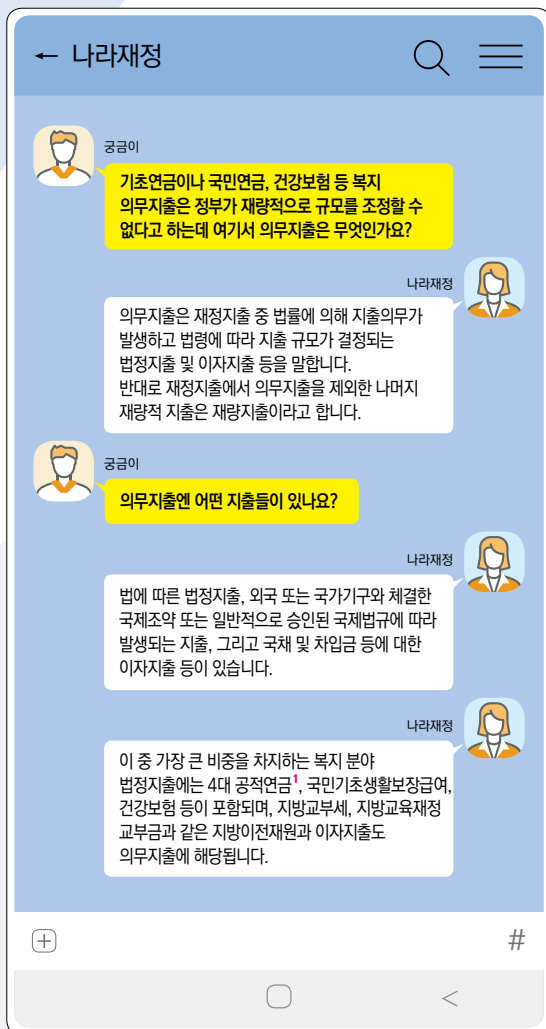


의무지출, 재량지출은 무엇인가요?

Tal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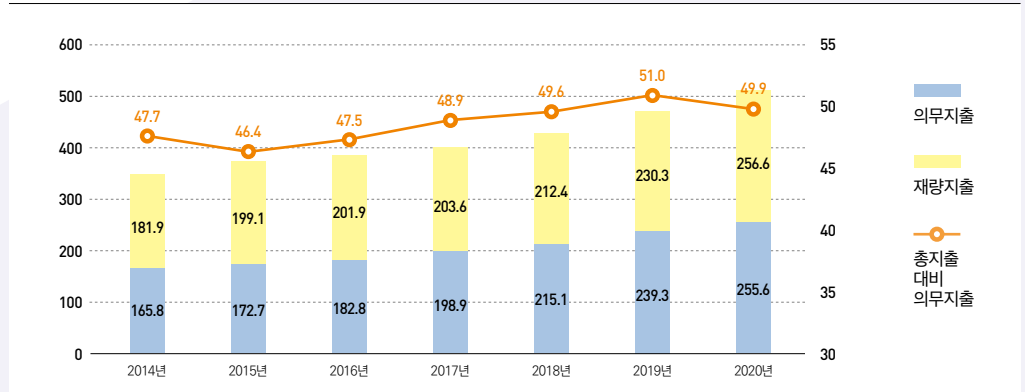
조현희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hyunheecho@kpfis.or.kr)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르면 재정지출 중 법률에 의해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의무지출이라고 하며, 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나머지를 재량지출이라고 합니다.



의무지출·재량지출 규모 및 총지출 대비 의무지출 비중 추이

(단위: 조원, %)



주: 2018년까지 결산(세입·세출외 제외), 2019년, 2020년은 본예산 기준

직장인들은 이달의 월급을 받으면 우선순위에 따라 지출할 곳을 결정합니다. 전기세, 수도세 등 각종 공과금을 내고, 대출금과 이자 등을 상환합니다. 꼭 지출해야 할 곳에 먼저 지출한 후 보험료, 적금 등에 지출하고 외식이나 쇼핑, 여행을 위한 자금을 남겨놓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법으로 지급 의무가 명시되어 정부가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의무지출과 정부가 재정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로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르면 의무지출이란 재정지출 중 법률에 의해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로 정의하고 있으며, 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지출을 재량지출이라고 합니다. 의무지출의 범위는 「국가재정법시행령」 제2조에서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의 법정지출, 외

국 또는 국가기구와 체결한 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라 발생하는 지출, 국채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지출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4대 공적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건강보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0년 본예산 기준 의무지출은 전년 예산 대비 6.8% 증가한 255.6조원이며, 재량지출은 전년 예산 대비 11.5% 증가한 256.6조원입니다. 총 재정지출(512.3조원) 중 의무지출이 49.9%, 재량지출이 50.1%를 차지합니다.

최근 고령화 등에 따라 복지 수요가 증대하면서 의무지출의 규모 및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의무지출의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무지출의 증가율과 산출내역, 재원조달방안을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는 지출 구조조정을 위해 재량지출 10% 의무감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Jan Brueghel the Younger, <A Satire on Tulip Mania>, 1640, Oil on Panel, 31 x 49cm, Frans Hals Museum of Haarlem

튤립 버블 경제의

狂氣^(기) 광^(광)

글. 최병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초빙교수, 『경제학자의 미술관』 저자

20세기 최악의 거품은 1980년대 중후반 일본의 자산 버블이다. 1989년 일본 자산 거품이 절정에 달했을 때 도쿄의 부동산 가치는 미국 전체 부동산 가격보다 높아 “도쿄를 팔면 미국을 살 수 있다”는 말이 나돌 정도였다. 1991년 거품이 붕괴되면서 결국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10년’으로 통칭되는 급격한 후유증을 앓아야 했다. 그런데 이런 버블경제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서 언급되는 역사적 경험은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소위 튤립 버블이라고 불리는 사례다. 1630년대 중반에는 네덜란드에서 튤립 한 뿌리의 가격은 약 3천길더까지 뛰었는데 지금 가격으로 환산해 보면 대략 9만유로 정도로 한화로는 1억 2천만원에 달한다. 당시 네덜란드 가정의 1년 생활비가 300길더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튤립 버블이 얼마나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는지 짐작이 된다. 이것이 바로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일어난 사실상 세계 최초의 거품 경제 현상이다.

17세기에 접어들면서 플랑드르 지방은 유럽 교역의 중심지로 부상하여 상업과 물류가 활발하게 늘어나게 되고 상인들은 부를 축적하게 되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초상화를 주문하거나 정원을 가꾸어 그들의 부를 과시하려고 했다. 튤립에 대한 수요도 처음에는 이러한 과시적 소비에서 비롯된 것이다. 당시 튤립은 귀한 꽃이자 부의 상징이었고, 희귀한 튤립을 보유한 사람일수록 부자로 인식됐다.



튤립에 대한 수요도 처음에는 이러한 과시적 소비에서 비롯된 것이다.

당시 튤립은 귀한 꽃이자 부의 상징이었고, 희귀한 튤립을 보유한 사람일수록 부자로 인식됐다.

1630년대에 들어서자 줄무늬 튤립의 가격이 치솟기 시작했다. 시장에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팽배하게 되자 부유한 상인계급은 물론 일반 서민들까지 튤립 구입에 뛰어들면서 시장은 튤립 열기로 가득 차게 되었다. 상업이 번성했던 네덜란드에서는 대부업과 같은 금융거래가 활발했기 때문에 이 또한 튤립 버블이 커지는 데 일조하였다. 그러나 순식간에 튤립 가격은 폭락했고 시장에서는 투매가 일어나면서 또 다른 광풍에 시달리게 되었다. 또한 뒤늦게 튤립 열풍에 동참했던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보고 말았다. 오늘날 주식시장에서도 개미군단이 몰려올 때는 이미 시장이 과열되어 버블이 꺼지기 직전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튤립 버블을 본격적인 주제로 다룬 영화가 2017년에 출시된 것이 바로 <튤립 피버>다. 이 영화에는 부유한 상인의 아내와 그녀의 초상화를 그리게 된 가난한 화가 얀(Jan)이 등장하고 사랑에 빠진 이들은 튤립 버블의 광기 속에서 일확천금을 꿈꾸게 되지만 가격 폭락으로 실패하고 만다. 튤립의 구근(球根)의 모양은 양파와 비슷하게 생겨서 혼동하기 쉬운데 영화 속 재미있는 장면은 주인공이 애지중지한 튤립 구근을 하인이 술에 취해서 그것을 양파로 착각하여 먹어버리는 황당한 사건도 일어난다.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된 화가는 바로 얀 반 호이엔(Jan Van Goyen)인데, 그는 튤립 열풍이 불자 본업인 그림보다 튤립 투기에 열중했다가 가격 거품이 빠지자 엄청난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고 한다. 그 이후 호이엔은 그림과 데생 2천여 점을 그려서 겨우 갚았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튤립 열기에 휩싸인 세태를 적나라하게 풍자한 그림은 플랑드르 화파의 대표적인 화가 페테르 브뤼헬(Pieter Brueghel)의 아들인 얀 브뤼헬(Jan Brueghel the Younger)이 1640년경에 그린 '튤립 광풍의 풍자화'(A Satire of Tulip Mania)이다.

그림은 튤립 광풍 속에 비이성적 투기 행위를 한 사람들을 원숭이로 묘사하고 있다. 그림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왼쪽 부분에는 튤립 가격이 급등하면서 희희낙락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오른쪽 부분에는 버블이 꺼지면서 낭패를 본 사람들의 패닉 상황을 그리고 있다. 왼쪽 상단 저택의 발코니에는 부자가 된 원숭이들이 테이블에서 파티를 즐기고 있다. 앞쪽 하단의 한 원숭이는 검을 차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귀족 신분으로 보이는데 튤립 가격의 목록이 적혀있을 듯한 종이를 들여다보고 있다. 가운데 한 원숭이는 튤립 한 뿌리를 자랑스럽게 들고 만족한 표정을 짓고 있다.

반면에 그림 오른쪽에는 패닉 상태에 빠진 원숭이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맨 오른쪽 하단의 원숭이는 가격이 폭락한 붉은 줄무늬 튤립을 땅바닥에 버린 채 오줌을 갈기고 있다. 그 위에는 흰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울고 있는 원숭이들이 보인다. 또한 그림 위쪽 멀리에는 검은 옷을 입은 무리도 있는데 아마도 투자에 실패하여 목숨을 끊은 원숭이의 장례행렬처럼 보인다. 당시 튤립은 부유층으로 신분 상승하는 지름길이었다. 뒤늦게 높은 가격에 튤립을 사들이며 투기 대열에 동참했다가 가격 폭락에 좌절한 수많은 사람들은 망연자실했다.

2010년에 나온 영화 <월스트리트: 머니 네버 슬립스, 2010>는 2008년 월스트리트에서 촉발된 금융위기를 다루고 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인 게코(마이클 더글러스 분)는 자신을 찾아온 딸의 남자친구에게 금융시장의 예로 튤립 버블을 드는 장면이 나온다. 맨해튼 이스트리버가 내려다보이는 그의 고급 아파트 벽에는 튤립 가격의 그래프를 붙여놓았다. “버블 스토리의 시작은 1600년대의 네덜란드에서 비롯되었지... 튤립 한 뿌리의 가치가 암스테르담의 강변의 아름다운 집을 한 채 살 수 있을 정도였는데... 이것이 바로 튤립 마니아(Tulip mania) 열풍이지... 그런 튤립 가격도 버블이 꺼지자 두 뿌리의 가격이 10달러로 하락해 버렸다네.”

영화에서 마이클 더글러스는 외친다. ‘인간의 탐욕은 좋은 것(Greed is Good)’이라고. 거품의 형성과 몰락은 언제나 그러한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러나 거품의 진짜 비극은 거품이 꺼지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이 거품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점이다. 중력의 법칙을 발견한 과학자 아이작 뉴턴은 18세기 초반 보물선을 인양하는 회사에 투자했다가 2만파운드를 잃고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한다.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어도 인간의 광기는 측정할 수 없다”고.

자본주의 윤리의 개척자, | 임마누엘 칸트



Immanuel
(1724~1804)
Kant

글. 민경국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독일의 도덕철학자 임마누엘 칸트(1724~1804)는 경제에 관심이 없는 은둔한 철학자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거의 매주 오후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친구들은 사업가, 상인, 은행가였다. 그들의 화제는 주로 경제와 정치였고 칸트의 친구들과 대화하며 경제마인드가 형성되어 시장이 돌아가는 모습을 알게 되었다. 그는 친구들의 회사에 투자해서 많은 돈을 벌었고 그 덕에 상당한 유산을 남겼다.

칸트는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 데이비드 흄 등 스코틀랜드 계몽 철학자들의 문헌을 두루 섭렵해 박식했다. 대학에서 경제를 가르치기도 했다. 애덤 스미스가 시장경제를 법학적으로 정당화했다면, 칸트는 윤리에서 자본주의의 정당성을 찾았다.

자본주의의 윤리, 정언명령

수리공 가정에서 자란 칸트는 어떤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이미 우리의 정신 속에 들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 기준이 바로 정언명령인데 어렵게 들리지만, 알고 보면 쉽다. 예를 들어 나는 내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것이 보편화되어 누구나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서로 믿을 만한 소통이 불가능해진다. 결국 나의 이익도 챙길 수 없게 된다. 도둑질도 마찬가지다.

이득을 위해 쉽게 도둑질하는 것이 보편화되면 모두가 서로 흄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소유한 것도 도둑맞게 된다. 이처럼 거짓말과 도둑질 같은 행위는 개인의 이득을 위해 타인을 수단으로 사용하고 모두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래서 거짓말과 도둑질 같은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의무가 형성된다. 정언명령은 이 같은 의무처럼 아무런 조건을 붙이지 않고 따라야 하는 윤리성의 법칙을 말하는 것이다.

칸트에게 가장 나쁜 사람은 스스로 예외가 되려는 사람이다. 나는 거짓말을 해도 되고, 다른 사람은 하면 안 된다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다)을 가장 미워했다. 자신은 아파트 두 채 갖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라고 하고, 제자식은 특목고 보내고 다른 사람은 못 가게 하는 등 내로남불은 스스로를 예외로 만들려는 것이다. 나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더 유별나고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여기고 행동준칙에서 예외를 인정받아 특권과 특혜를 누리려는 것이다. 즉, 내로남불은 불의(不義)다. 내로남불은 칸트가 제거되어야 할 대상으로 여겼던 신분 서열을 중시하는 봉건·귀족사회에 대한 모방심리에서 비롯되었다.

칸트의 사상에 의하면 소득재분배에서와 같이 수혜 계층을 위해서 납세자들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희생된 계층은 수혜계층의 권의 증진이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당한 것이다. 누진세 제



러시아 칼리닌그라드의 쾨니히스베르크 성당(좌)
칼리닌그라드에 위치한 칸트의 묘소(우)



칸트의 사상은 범세계적인 영향을 끼쳤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가 헌법가치로서 법치국가를 세우고, 인간의 존엄성 개념을 중시하는데 이는 전적으로 칸트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도도 소득수준에 따라 상이한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불의의 조세다. 정의(正義)의 조세는 단일세율제다. 인·허가제도도 차별적이기 때문에 불의의 법이다.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에게 퇴임 후에도 재임 때와 같은 예우를 베푸는 전관예우, 동일한 죄가 있다고 해도 부유층은 무죄, 서민층 사람에게는 유죄판결을 내리는 유전무죄·무전유죄 같은 차별과 예외를 인정하는 나라는 불의의 나라다.

시장질서는 정언명령을 실현하는 사회

정언명령을 법학적으로 해석한 것이 바로 법치주의다. 특정 그룹에 대한 특혜나 차별,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은 법이 아니다. 법은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만 공권력을 행사하는 국가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된 법치국가라는 게 칸트의 설명이다. 그가 반대했던 것은 특정 그룹을 차별하거나 국가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입법이었다. 인간을 국가목적에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그래서 자유와 존엄을 파괴하는 입법을 법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이다.

정언명령이 지배하는 이상사회가 시장경제라는 칸트의 설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유로운 분업 교환은 상호 간에 인격을 존중하는 정언명령이 구현되는 것이다. 교환을 통해서 기업들은 고객을 위해 봉사하고, 반대로 고객은 기업을 위해 봉사한다. 이게 시장을 다목적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자유경쟁이 도덕을 파괴한다는 주장으로 시장경제를 폄하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칸트는 목소리를 높였다. 경쟁은 성실성, 엄격성, 정직성 등 도덕성을 촉진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칼리닌그라드에 있는
칸트의 추모패



칸트 사상의 힘

칸트는 평생 자기가 태어난 쾨니히스베르크에 있는 대학에서 50마일 이상 나간 일이 없지만, 그의 사상은 범세계적인 영향을 끼쳤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가 헌법가치로서 법치국가를 세우고, 인간의 존엄성 개념을 중시하는데 이는 전적으로 칸트 사상의 영향이라는 게 일반적 평가다.

우리에게 자유의 중요성은 물론 자본주의의 도덕성을 일깨워준 것은 그의 공로라고 할 수 있다. 결혼과 출산, 교육, 이혼 등 가족의 가치와 도덕적인 행위까지 비용과 편익을 분석해 이용하는 경제학을 반대하는 것도 칸트였다. 그는 경제는 도덕을 필요로 하지만, 도덕은 경제적 이득 또는 경제적 변형 등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칸트는 보호무역은 전쟁을 야기할 뿐이라고 개탄하면서 영구적인 평화는 자유무역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호소했다. 전쟁을 극복하고 모든 나라의 보편적 이득을 증진시켜 세계평화를 창출하는 게 자유무역이라는 그의 인식은 1948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통하여 국가 간 상품거래에 장애가 되는 조치를 완화 혹은 철폐하여 자유무역 실현에 기여했다. 그 결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작은 국지전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대미문의 평화를 누리고 있으니 이 또한 칸트 사상의 기여가 아닐 수 없다.

경제를 보는 눈을
길러주는



재정·경제 신간도서

디지털 르네상스

01

지은이

조엘 월드포겔

- 조엘 월드포겔은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 거주하면서 미네소타 대학교 칼슨 경영대학의 프레드릭 R. 카펠 기금 의장을 맡고 있다. 저술로는 <스크루지 경제학: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사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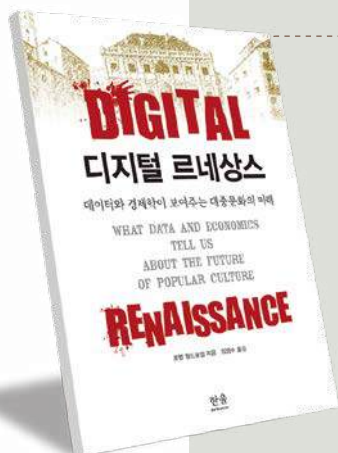
옮긴이 임정수

출판사 한울 **발간일** 2020년 2월 28일

66

디지털 테크놀로지, 미디어 산업의 새로운 황금시대를 열다

저자는 이 책의 저술 작업을 위해 두 가지 측면에서 노력했는데 바로 데이터 수집과 시대별 비교를 위한 지표화 작업이다. 데이터 수집은 연구진의 연구 의지가 만 들어낸 결실이며, 미국 미디어 산업이 지난 100년 동안 축적해 둔 데이터와 각종 평가시스템의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저자는 여러 데이터를 가지고 여건이 다른 시대를 비교하는 방법을 고안해내 한국 미디어 산업을 평가해 보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역사는 문화의 발상지에서 계속 번성하기보다 다양한 문화가 유입되고 교차하며 섞이는 곳에서 번성한다.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은 문화의 국경선을 넘어뜨리며 다양한 문화를 더욱 빠르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과거였다면 시장에서 선택받지 못했을 다양한 상품들도 유통의 장에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이를 책 속에서는 '디지털 르네상스'라고 칭하고 있다. 우리는 문화적 암흑기에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디지털 르네상스에 살고 있는 걸까? 이 책을 통해 알아보자.



- Chapter 1 창조산업: 불확실하고 고비용이지만, 보존 가치가 있는 산업
- Chapter 2 음악의 디지털화: 그냥 즐겨?
- Chapter 3 영화의 디지털화: 할리우드는 몰락하는가?
- Chapter 4 텔레비전의 디지털화: 거대한 볼모지에 꽃이 피었나?
- Chapter 5 책의 디지털화: 다양한 수준의 쓰레기?
- Chapter 6 기타 영역의 디지털화: 사진, 여행사, 그 외
- Chapter 7 디지털 르네상스의 가치: 롱테일,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 Chapter 8 디지털 팜 시스템과 번들링의 전망
- Chapter 9 두 지적재산 체제의 이야기: 할리우드와 발리우드의 교훈
- Chapter 10 디지털화, 프랑스인, 그리고 바이킹의 귀환
- Chapter 11 브릿지 트롤: 기술적 게이트키퍼의 위협
- Chapter 12 위기인가, 르네상스인가?

별난 기업으로 지역을 살린 아르들렌 사람들

02

지은이

베아트리스 바라스

- 베아트리스 바라스는 아르들렌 노동자협동조합의 설립자 중 한 명으로 은퇴 후에도 여전히 협동조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더불어 사회적금융기관인 네프(NEF)의 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이끌어가고 있다.

옮긴이 신재민, 문수혜, 전광철

출판사 착한책가게 발간일 2020년 3월 6일

KPFIS's
library

66 버려진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사람들

프랑스의 남부에 위치한 아르데슈 지역을 찾아온 젊은이들이 쇠퇴한 지역을 재건하기 시작했다. 1975년 프랑스 아르데슈 지역으로 들어간 청년 여섯 명은 폐허가 된 방적공장을 복원하고 버려진 지역자원인 양모를 활용한 지역개발에 나섰다. 인구, 부, 권력 등 모든 것이 기업의 금융 권력의 도구로 전락한 세계에서 외면받아온 지식, 공간, 자원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 것이다. 이들은 지역과 사람 사이에 새로운 균형을 이루고자 생계비를 최소화하고 품삯을 모아가며 삶과 일이 분리된 것이 아님을 행동으로 실천해나갔다. 1982년에는 아르들렌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양모 제품을 생산하여 윤리적이고 친환경적인 소비를 지향하는 이들에게 판매했다. 이후 양모박물관을 세우고 서점과 카페, 레스토랑 등으로 사업을 확장해나갔으며 현재는 신뢰와 연대에 기반을 둔 지역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이 책은 지역에서의 삶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통찰력을 더해주고 별난 실천 연대기로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들려준다.



- 1장 1972~1975 옛날 옛적에
- 2장 1975~1978 개척의 시절, 고난의 시절
- 3장 1978~1982 협동조합 설립의 길 위에서
- 4장 1982~1985 경영을 향한 첫걸음
- 5장 1986~1990 전방위로 성장에 매진하다
- 6장 1990~1995 살아 숨 쉬는 박물관
- 7장 1996~2000 지속가능한 일터 만들기
- 8장 2001 경험으로 맺은 결실
- 9장 2002~2005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다
- 10장 2006~2013 아르들렌, 다시 날다

Financial Calendar

4月

April



재정

2019년 결산검사 의뢰
(기획재정부→감사원)



국제

IMF 세계경제전망보고서
(World Economic Outlook Report) 발표

January

01

재정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각 중앙관서→기획재정부)

경제

통계청 2019년 연간 고용동향 발표

국제

IMF 수정세계경제전망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February

02

재정

2019년 총세입·총세출 마감
2019년 결산보고서 제출
(각 중앙관서→기획재정부)

경제

통계청 2019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 발표

March

03

재정

2021년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기획재정부→각 중앙관서)

경제

한국은행 2019년 4/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국제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July

07

경제

기획재정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국제

IMF 수정세계경제전망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

August

08

경제

통계청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발표
통계청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September

09

재정

2021년 예산안 제출(정부→국회)
2021년 국유재산종합계획 제출

경제

한국은행 2/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국제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2020

□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OECD, 3.2.)

- OECD는 코로나19, 무역갈등, 영국-EU 관계, 금융 불안 등의 영향으로 2020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대폭 하향 조정하여 2.4%로 전망.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성장률 전망이 2.0%로 하향 조정되었으나 G20 중 5위 유지

□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화 and 조기 극복을 위한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확정(기획재정부, 3.17.)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020년 추경 국회 확정 규모는 정부안 대비 43억원 감소한 11.7조원으로, 세출확대는 정부안 8.5조원에서 2.4조원 순증(0.7조원 감액, 3.1조원 증액)한 10.9조원, 세입경정은 △3.2조원에서 2.4조원 증가한 △0.8조원으로 조정

□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화 and 조기 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시행(기획재정부, 3.23.)

- 3.17.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과 함께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3.23.에 공포·시행됨
- 주요 내용으로는 ①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소득·법인세 감면, ②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한시 감면, ③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 한시 상향, ④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⑤ 3~6월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⑥ 3~6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한시 확대, ⑦ 기업 접대비 한도 한시 확대 등

□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확정(기획재정부, 3.24.)

- 예산안 편성지침의 주요 내용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 견지”와 “재정건전성 기반마련”이라는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에 따라 ① 경제 역동성 회복, ② 미래 성장동력 확충, ③ 사회안전망 보강, ④ 감염병 등 사회재난 대응체계 고도화라는 4대 투자중점을 설정

April

04

- 재정** 2019년 결산검사 의뢰 (기획재정부→감사원)
- 국제** IMF 세계경제전망보고서 (World Economic Outlook Report) 발표

May

05

- 재정** 2021년 예산요구서 제출 (각 중앙관서→기획재정부)
- 2019년 국가결산보고서 제출(정부→국회)
- 2019년 기금운용평가결과 발표
- 2019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발간
- 경제** 통계청 2019년 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 결과 발표
- 통계청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June

06

- 경제** 한국은행 1/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 국제** OECD 경제전망보고서 (Economic Outlook) 발표
-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October

10

- 재정** 국유재산/물품 결산지침 확정
- 국제** IMF 세계경제전망보고서 (World Economic Outlook Report) 발표

November

11

- 재정** 2021년 예산안 국회 심의·의결
- 경제** 통계청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 국제** OECD 경제전망보고서 (Economic Outlook) 발표

December

12

- 재정** 2021년 예산 확정
- 경제** 기획재정부 2021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 한국은행 3/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한국재정정보원-한국정보화진흥원 업무협약 체결

한국재정정보원(원장 김재훈)은 3월 23일(월), 「전자정부/ICT 및 재정정보시스템(FMIS) 분야 글로벌 사업」협력을 위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개발도상국 대상 전자정부/ICT 및 재정정보시스템(FMIS) 분야 연수과정 공동 운영 및 교재 개발 △개발도상국 대상 전자정부/ICT 및 재정정보시스템(FMIS) 분야 컨설팅 △국내 전자정부 기업 수출지원 △양 기관 전문인력 교류 및 시설공유 등을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한국재정정보원 김재훈 원장은 “전자정부 정책 수립 및 해외수출 사업 경험이 있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재정 정보화에 이바지하겠다”며, “더 나아가 글로벌사업뿐만 아니라 정보화 분야에 대해서도 양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활용하여 상호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 p f i s news

한국재정정보원, 코로나19 대비 ‘생활방역형 근무체제’로 전환

한국재정정보원은 10일, 코로나 19에 의한 비상시를 가정해 ‘업무연속성 확보 절차(BCP: Business Continuity Plan)’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정부과천청사에 임시사무실을 개소하고, dBrain·e나라도움 운영 직원과 유지보수업체 직원 일부를 임시사무실로 분산시켜 근무에 들어갔다.

16일에는 협력사 직원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협력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분산근무를 시행했다. 정보원 공간 일부나 협력사 본사, 재택근무 등으로 근무지나 근무방식을 변경하여 기존 근무하던 사무실의 밀집도를 크게 낮췄다.

임시사무실 확보와 분산근무에 이어, 한국재정정보원은 23일 감염병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생활방역형 근무체제’로 전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장, 대면회의, 부서회식을 금지하고 모든 부서가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도, 점심교대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애독자 QUIZ

독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월간 「나라재정」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퀴즈 정답과 함께 평소 재정에 대해 궁금했던 사항을
“재정 Talk Talk”에 질문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립니다.

애독자 퀴즈 정답 및 다양한 의견 보내주실 곳

【이메일】 narajaejung@kpfis.or.kr

【애독자 퀴즈 정답 응모 기간】 2020. 4. 20. ~ 2020. 5. 8.

문 제

재정지출 중 법률에 의해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일컫는
재정 용어는 무엇일까요?

3월호
애독자퀴즈
당첨자 발표

☆ 퀴즈 정답

예비비

☆ 상품 당첨자

eom*****@naver.com
thu*****@naver.com
del**@cau.ac.kr
bam*****@gmail.com
mar*****@nate.com
gnp*****@naver.com

※ 당첨자에게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Tall size)
기프트콘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POSTCARD



항상 나라재정을 챙겨보는 애독자입니다.

이번호에도 유익한 내용이 많아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슈를 보기 좋고 쉽게 정리해 주셔서 몰랐던
내용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정보를 많이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재정 항상 파이팅입니다!!

thu*****

※ 〈월간 나라재정〉의 개인구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narajaejung@kpfis.or.kr로 메일 주세요.



한국재정정보원은
국가 재정의 밝은 내일을 위해
재정정보화를 이끌어갑니다.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Tel 02-6273-0500 Fax 02-6312-8959 www.kpfis.or.kr



9 772508 887000
ISSN 2508-8971